

Left21.com

제72호 | 2011년 12월 31일 ~ 2012년 1월 13일 | 값 1,800원

리포트21

뿌리깊은 부패 정권

제 임기 채울 수 있을까

» 관련기사 2~3면



리포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말을알까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 잠이 오지 않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어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

이명박, 누굴 놀리나

“내가 열반아서 다 까 버리면 국정 운영이 안 된다.”

전 검찰총장 김준균, 제발 다 까라.

“최근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부쩍 대통령 가계도를 챙기고 있다.”

검찰이 측근 비리를 연일 터뜨리자.

“나 혼자 당하지는 않겠다.”

디도스 연루 최구식의 협박

“청와대에서 전화 두 번 왔지만 외압은 없었다.”

경찰총장 조현오, 밥은 먹었지만 식사는 아니다?

“한순간의 작은 친일의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치인생 전부를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이런 편파적이고 소아병적인 사고방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김정일의 생일은 2월16일이다. … 6×6×6=216이다. [김정일의] 선거구 번호가 한때 666이었다. 김정일은 사탄의 상징이다.”
조갑제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
인디밴드 ‘밤섬해적단’이 중학교 친구 김정일을 다룬 노래. 이것도 국가보안법 위반?

“이것은 조문을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여.”

한 네티즌, 이명박 정부의 ‘북한 주민 위로’에 대한 평가

“최구식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전날 밥을 먹으면서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여권 핵심 인사의 증언, 그 카드가 디도스?

“도덕적으로 완벽한 맛, 풍부한 곶수와 비리로 우려낸 역겨운 때국의 맛. 가가새끼 짬뽕”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라면 광고 패러디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금요일 저녁 7~8시(다음호는 1월 13일)

강남역 11번 출구 글라스타워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널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해화역 4번 출구
종각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대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물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 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시국선언을 거리 투쟁으로 대학생들이 불의와 부패에 맞서 투쟁에 나선다면 이명박의 위기는 더 심화할 것이다. (사진은 2007년 대선 때 BBK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

확산되는 대학생 시국선언

“이승만 퇴진의 역사를 기억하라!”

12월 26일 서울대 학생회 대표자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디도스 사건의 청와대 몸통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놓단됐다. … 이명박 대통령은 … 사건의 실체를 전 국민 앞에 직접 밝혀라! …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정부는 지난 1960년 3월 15일의 선거 부정이 정권의 퇴진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하라! … 호지부지 덮인다면 … 국민적 분

노는 다시금 거리를 뒤덮을 것 … 서울대학교 학생들 또한 분명히 일어나 민주 수호의 길로 달려 나갈 것이다.”

방학 중인데도 온라인에서만 하루 만에 2천6백 명 넘게 이 시국선언문에 서명했다. 서명자는 계속 늘고 있고, 신문 광고를 위한 모금도 28일 오후 4시 반 현재 1천만 원이 넘었다.

서울대 학생들의 반정부 시국선언은 정권에 또 다른 흉터를 남길 것이다. 옳게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고려

대, 숙명여대 등의 학생회들도 디도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려 한다.

박종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디도스 사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건들”이라며 다른 대학 총학생회들과 공동 선언도 고민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에 나서는 학생들이 김정일 사망으로 권력층 비리가 묻히면 안 된다

고 주장하는 것도 옳다. 정권과 1퍼센트 특권층의 불의와 비리에 대학생들의 불만이 이토록 높은 것은 비싼 등록금과 높은 청년실업 등 청년세대의 열악한 현실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권력기관도 제대로 통제 안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 1997년처럼 ‘정권 퇴진’을 외친다면 이것은 다른 피억압 민중의 투쟁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김문성

썩은 내를 풍기며 파열음을 내는 정권

요즘 경찰과 검찰 출입 기자들은 정치부 기자들에게 이명박 가계도 챙겨주느라 바쁘다고 한다. 친인척 중에 비리 연루 의혹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

이명박 일가의 탐욕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에게 위협인 것은, 권력형 비리가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부에서 폭로되고 있고, 이를 파헤치는 주체가 그동안 이 정권을 떠받쳐 온 검찰과 경찰이라는 데 있다. 권력기관에 대한 이명박의 통제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10월에 폭로된 내국동 사저 의혹은 청와대 인사가 소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신동아》 취재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상득 보좌관들이 차명계좌로 거액을 돈세탁한 사실을 들춰냈다.

일가 비리가 터져 나온 시점도 역대 정권과 견줘 훨씬 빠르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아들들의 비리는 집권 5년차에 가서야 드러났다.

권력기관들 사이의 암투 때문에 이 과정이 가속화하고 있다. 디도스 사건이 밝혀지는 과정이 바로 그랬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 과정에서 폭로된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이명박을 위해 몇가지를 감추려한 듯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 부분까지 밝히며 이명박을 물먹였다.

이제 청와대 몸통설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탈당을 강요당한 한나라당 최구식이 “혼자 죽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 심상치 않다. 이 사건은 갈수록 위태게이트를 닮아가는데, 위태게이트에서 결정타는 닉슨의 거짓말이었다. 이명박의 거짓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물론 이명박은 김정일 사망 정국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장례식이



박근혜와 둘러리 비대위원들 벌써 이명박 비리 추문의 뒤퉼 뉘아주는 '비대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끝나고도 마냥 이 정국이 유지될 수는 없다. 12월 26일 서울대 학생회 대표자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디도스 사건의 청와대 몸통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런 움직임과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수 있고 이것은 권력기관의 마비와 암투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김영삼 정부도 1997년 1월 한보철강이 부도나면서 5조 원이나 되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미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기력을 잃은 김영삼은 상황을 무마하려고 5월에 아들 김현철을 구속해야 했다. 당시 대권 후보였던 이회창은 김영삼을 신한국당에서 쫓아내고 당명도 한나라당으로 바꿨지만 대선 패배를 막을 수는 없었다.

돌아보면, 정권 말기에 다음 정권을 놓고 지배자들끼리 벌이는 암투가 극에 달해 권력형 비리가 폭로되고 레임덕이 심화되면서 대중투쟁을 자극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 모두 권력형 비리 폭로와 집권당 분열 속에서 집

권 4~5년차에 자신이 만든 집권당에서 쫓겨났다.

정권 재창출

박근혜의 처지도 1997년 이회창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이명박과 선을 긋고 중도층 대중을 흡수해야 하는데, 이는 보수층의 분열을 낳을 수 있다.

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이 이인제와 갈라서서 꼬마민주당과 합당하자, 이인제가 박정희 흉내를 내고 다니며 보수층 표를 노린 것도 이런 효과였다.

그렇다고 보수층 결집에 치중하느라 이명박 정부를 감싸면 박근혜도 함께 가라앉을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의 특징은 ‘좌충우돌’과 ‘동요’가 될 것이다.

박근혜는 보수층부터 잡자고 부자 증세에 반대하고, 국회 차원의 김정일 조문단 구성에 반대하며 우익들을 기쁘게 했지만, 막상 한나라당 비대위 구성은 ‘비MB’

보수 인사들로 구성했다. 한미FTA에 반대표를 던졌던 황영철을 대변인으로, 4년 동안 이명박의 정책을 줄곧 비판해 왔던 김종인과 이상돈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 날치기에 동조하는 등 본질에서 이명박과 다를 바 없는 박근혜호에 들러리로 승선한 이들이 눈속임 이상의 ‘쇄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게다가 면면을 들춰 보면 박정희와 연관 있는 인물이거나 그런 가문 출신들이 꽤 있다.

그래서 박근혜가 최근 당정청회의에 불참하며 날을 세웠지만 이명박과의 관계를 놓고 동요를 거듭할 것이다. 따라서 BBK 의혹 폭로 장본인인 박근혜로서도 BBK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것이 부담스런 일이다. 이미 인터넷에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가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고 말한 동영상도 돌고 있다.

결국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비리의 뒷수습을 하는 ‘비리’대책위가 될 듯하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비대위는 점점 이명박과 척을 지는 방향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이명박과 박근혜 비대위에게 구원의 동아줄을 던져 준 것은 민주통합당이다. 진보진영은 이런 민주통합당의 행보를 비판해야 한다.

지배자들의 암투가 치열하고, 권력기관들이 이완되는 틈을 이용해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 정책과 각종 부패 추문에 맞서는 대중투쟁을 조직하며 독립적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 한미FTA 반대 투쟁의 분출이 이명박의 위기와 분열을 더 앞당겼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문성

김정일 사후 북한의 앞날 — 유물론적 분석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계간 《마르크스21》 편집자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한 인사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이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온갖 억측과 소설이 난무했다. 국정원장 원세훈은 ‘김정일이 왔다는 열차가 평양역을 떠나지도 않았다’는 얘기로 정보력 부재에 따른 비난을 피해 보려 했다. 심지어 왜 하필 김정일 사망이 이명박의 생일에 발표됐는지를 ‘심각하게’ 분석한 언론도 있었다. 붕괴 예측 입장이든 안정 예측 입장이든 각자 자신의 희망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기본인 듯했다. 그럼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앞뒤로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들과 그것에 근거해 전망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불확실성 속에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며 그런 불확실성은 북한 사회의 엄청난 잠재적 불안정성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잠재적 불안정성

자유주의 성향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개 ‘김정일 사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너무도 조용하고 차분하다’며 북한이 안정된 권력 교체를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 애초에 우파들의 이런 ‘붕괴론’은 조야한 억측이었다 —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안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은 유호 통치로도 그러저럭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당국은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에 놀라울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김정은은 “경애하는 영도자”로 불리며, 곧 총서기 같은 최고 지위에 추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후계 체제를 빠르게 안정화하려는 이 시도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그만큼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라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주변국들의 반응도 북한이 진정으로 안정돼 있음을 보여 주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불안정화를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중국 관료들이 김정은 후계 체제에 신속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북한의



대를 이어 계속? 북한의 잠재적 불안정성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동요는 김정은 체제를 풀기 어려운 난관으로 몰아갈 수 있다.

불안정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이 대량탈북 사태를 낳아 중국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거나, 미국·일본·한국에 개입 빌미를 줘,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 위협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한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후계 체제를 사실상 인정했고, 식량 지원 등으로써 당분간은 북미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북한과 뉴욕에서 실무 접촉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런 분위기를 종합해 <워싱턴포스트>는 “누구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고 실토했다. 최근의 사태 전개로, 김정일 유고시 북한이 즉시 붕괴할 것처럼 떠돌던 우익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동전의 뒷면으로서 미국과 남한 당국이 북한을 붕괴시키기를 원한다는 자민통계열 일부의 주장도 부정확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실제 상황은 이보다는 복잡하다.

잠재적인 관료 내 갈등과 경제적·외교적 난제들

‘북한의 안정에 한반도의 안정이 달려 있다’며 아무리 희망 섞인 관측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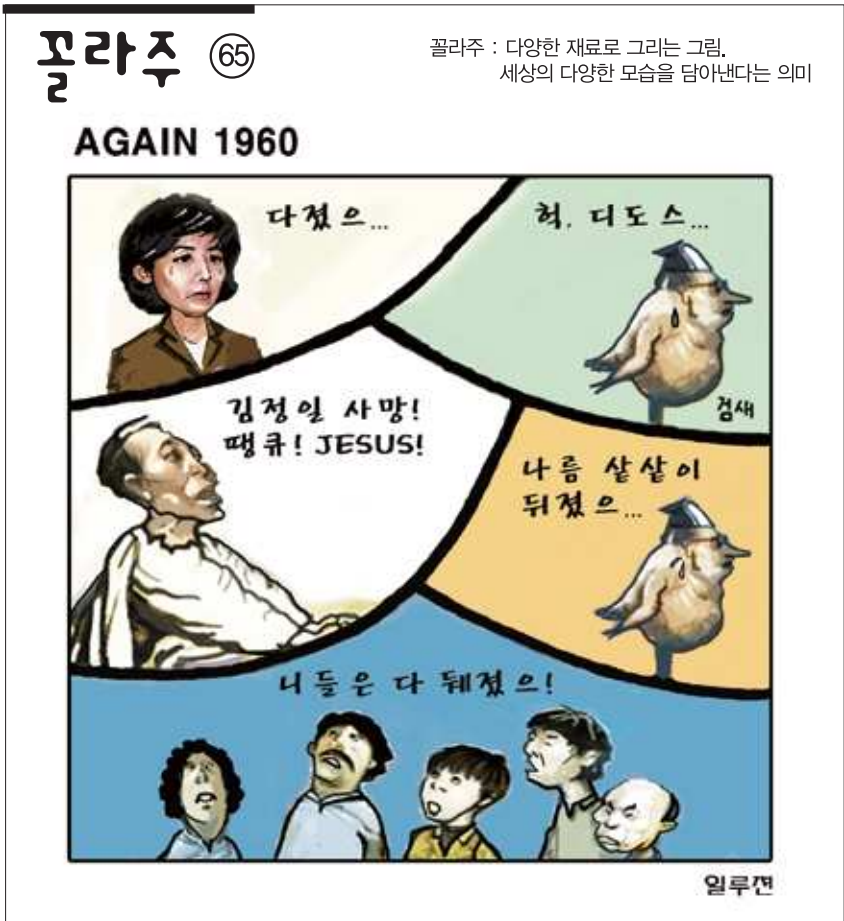
해도 누구도 스물여덟에 후계자가 된 김정은 앞에 큰 시험대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 북한 <로동신문>은 2010년 1월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정치사상적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 면에서도 강국 지위에 올라섰지만 인민 생활에는 결린 것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 수령님은 인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유호를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민 복지 향상을 약속했었다. 이제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민을 달래는 것은 김정은의 몫이 됐다. 그러나 1990년대 산업 가동률이 평균 30퍼센트 수준이었고, 2000년대에도 경제가 그다지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과제를 성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가 회복되려면 국제 금융기구를 로부터 돈을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 회복은 대외정책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선, 북미관계를 잘 풀어야 한다. 일본으로부터 받으려던 보

상금도 2002년 북미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받기 직전에 날아갔다. 북미관계는 핵·미사일 문제와 직결되는데, 핵·미사일 포기과 보상 간 함수는 여러 번 수속에서 북한 관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쟁점이다. 당분간 북한 당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전에 시작된 나선과 황금평 등 경제 특구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개혁의 속도와 폭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미 북한 관료들 사이에서는 ‘정치 중심’이나 ‘경제 개발·실용주의’나 하는 미묘한 강조점 차이가 있다.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생기는 변화를 둘러싸고도 대응이 갈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점점 중국 경제에 원료를 공급하는 구실을 하고 있는데 — 북한의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은 2009년 2억 달러에서 2011년 10억 달러로 증가했다 —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의 등락에 민감해지고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미중 관계라는 더 상위 차원의 불확실성은 북한 대외정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미국과 중국은 밀접하면서도 갈등하는 관계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

을 견제하려 하며,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는 않지만, 핵심적 이해관계를 침해당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과 경향 속에서 북한은 양국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언제든지 이용하려 할 수 있는 취약한 국가다.

맺으며

요컨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의 북한은 위험 요소가 곳곳에 있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고, 젊은 상속인은 머지 않아 경제와 대외관계의 풀기 어려운 고차원 방식에 부딪힐 것이다. 불행히도 이 방식은 관련국들이 단기적인 협조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훨씬 더 넓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동역학에 달려 있는 문제다. 12월 20일자로 발표한 다함께 운영위원회 성명서(<레프트21> 12월 21일치에 재게제)에서도 지적했듯이, 진정한 좌파라면 북한 현 체제의 안정을 염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장래 펼쳐질 수박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노동계급이 민주주의와 자기 자신의 해방을 위한 혁명적 투쟁에 나서기를 바라야 한다.



정봉주는 무죄다

진실을 석방하고 거짓을 구속하라

사법부가 BBK 주가조작 사건을 폭로해 온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사진)을 구속했다. 현 국가 권력의 누수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 보려는 의도였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의혹을 확신으로 굳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도 일제히 한국의 표현의 자유 격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봉주는 “제가 구속 수감됨으로 인해 BBK 판도라의 상자는 다시 열릴 것”이라며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지만, 내일은 거짓이 구속될 것”이라고 했다. BBK 사건은 주가를 조작해 소액 투자자 5천여 명에게 6백억 원의 피해를 입혔던 희대의 사기극이다. 자살한 이도 나왔다. 정봉주의 폭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BBK에 운용자금을 출자한 회사가 ‘다스’라는 사실은 김경준에 의해 밝혀졌



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도곡동 땅 주인이라는 사실은 검찰 발표로부터 추정 가능한 사실이다.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주장은 1998년 감사원 특별감사 때 전 포항제철 회장 김만제의 입에서 나왔다. 도곡동 땅은 1985년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 큰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현대건설과 전도 씨에게서 매입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정봉주만을 허위 사실 유포로 구속했다.

정봉주 구속이 정당하다면 같은 이유로 구속해야 할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박근혜가 있다. 박근혜는 2007년 대선 당시 “BBK의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나왔다 ... [이명박 후보는] 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게 아니라고 변명해야만 하는 후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명박 자신이 광운대 특강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자랑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있다. 정봉주 탄압은 역효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 친박계 한나라당 의원인 이해훈조차 “[정봉주]가 왜 유죄인지 모르겠다”며 세무 조사를 피하려고 ‘다스’가 싱가포르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폭로했다. BBK 의혹 제기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동엽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좌파의 대안

1월 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를 위한 민주노총 각급조직 전현직 간부 및 현장활동가 1445인 선언'도 발표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고 배타적 지지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언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캠페인에 앞장섰던 일부 활동가들도 여기에 참가했다. 이데올로기적 후퇴를 수반하며 비민주적으로 추진된 통합에 반감이 큰 것이다. 집권 시절 노동자들을 탄압한 장본인들이 진보정당에 합류한 상황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이 주장하듯,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3자 통합당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철회돼야 한다." 진보신당, 사회당도 존재하며 노동자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외의 타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가로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분란만 낳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단결"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실상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에 대한 지지를 모두 열어놓는 방식의 총선 방침을 정하고 있다. 김영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진보정당의 범위는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복수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라는 관점에서 민주노총의 총선방침 뿐 아니라 정치방침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 기성정당에 대한 배타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복수의 진보정당 지지'로 단결을 꾀하며 불균등하고 모순된 기대를 가진 노동자들에게 개입해야 한다.

한다. 기성 자본가 정당이 파고들면서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를 뒤서는 안 된다.

반면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과 정당을 분립하자'는 태도도 옳지 않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며 노동자들의 시야를 협소하게 해서는 안 된다.

통합진보당

그런데 일부 좌파 활동가들은 더 나아가 '통합진보당은 지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실제 '1445인 선

언'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안 문제에선 합의가 안 돼, 이런 생각이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통합진보당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을 민주노총 지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도 맞지 않다. 이것은 통합진보당 당원이거나 지지자인 노동자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태도다.

그 점에서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1445인 선언'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비록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의 수준으로 후퇴했지만, 그 당의 노동계급 기반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천에서도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투쟁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당에 집단 입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총선 등을 거치면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노동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국회에서 유의미한 의석을 가진 진보정당을 통해 법안을 개정하면 노동자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한미FTA 반대 집회 연단에 함께 선 통합진보당·진보신당 지도부

이들일수록 이런 기대를 더 가질 수도 있다.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던 좌파 활동가들이 이런 노동자들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단지 '당신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진보정당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을 지지하라'고 요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좌파 활동가들은 통합진보당 같은 개혁주의 정당에 기대를 갖는 대중 속에서 운동을 건설하고 영향력을 넓히려려고 노력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내년 양대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등의 약진을 기대하며 '정치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좌파가 개입해 투쟁을 건설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좌파 활동가들은 '배타적 지지' 철회의 대안이 될 민주노총의 새로운 정치방침으로,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복수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와 이를 통한 지속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을 제시해야 한다.

박설·전지윤

추천 도서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김정일 사후 한반도를 통찰하게 해 줄 길잡이

김정일의 사망과 그 여파로 안 그래도 불안정한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차라리 북한 체제가 김정을 중심으로 빠르게 안정되는 게 좋다는 일부 자유주의자와 좌파 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의 상황을 전망하고 온갖 정점들을 이해하는 데 김하영이 쓴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이하《한반도》),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이하《북한》)는 진보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는 남한 우익들이 북한 3대 세습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폭로한다. 재벌가의 세습 문제가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잘 만나 특혜를 물려받은 것은 재계만의 일이 아니다.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친인척 비리는 역대 정권에서 끊이지 않았다. ... [전 외교통상 장관 유명환의 딸 특채 사건] 벌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유명환은 세습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아라'고 비꼬았다."(《북한》)

미국 지배자들도 마찬가지다. 인권 탄압과 군비 증강 등의 문제에서 이들도 북한 지배자들보다 한 수 위다. 따라서 남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김하영 지음 | 책벌레 | 408쪽 | 1만3천 원

《3대 권력 세습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

북한 체제에 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김하영 지음 | 다함께 | 92쪽 | 3천5백 원

한 우익과 미국 지배자들은 북한의 3대 권력 세습과 비민주성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무엇보다 저자는 한반도 긴장과 북한 핵개발 등의 책임이 바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에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 지배계급이 이를 핑계로 군비증강에 자원을 쏟는데 정

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남북 지배자들은 '싸우는 형제'로서 경쟁하지만, 남북의 다수 민중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공생도 해 왔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때 박정희는 통일 정세를 핑계 삼아 유신 헌법을 추진했고, 김일성도 헌법을 개정해 내각제를 주석제로 바꿨다. "박정희와 김일성은 남북 대화를 이용해 위태롭던 권력을 대폭 강화하도록 서로 도왔던 것이다."(《한반도》)

1996년 총선 직전에 당시 김영삼 정부가 북한에게 비무장 지대에서 무력시위를 해 달라고 부탁한 사건은 남북 지배자들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 준 일이었다.

싸우는 형제

북한 체제를 일컬을 때 사람들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개처형, 수용소 등의 이미지를 연상하며 부정적 의미로 쓴다. 즉 북한의 '사회주의'는 남한과 미국의 자본주의보다 못한 체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3대 권력 세습의 북한은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사회주의와 조금

치도 공통된 점이 없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정의했다. 즉,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것을 뜻한다."(《북한》)

그런 점에서 북한은 사회주의와 거리가 멀다. 1945년에 북한에서 노동자 혁명은 없었다. 오로지 소련이 한반도 북부를 점령해 "다른 나라를 점령한 승전국은 자신의 체제를 점령당한 나라들에게 강요할 권리가 있다" 하며 북한에 자신들의 체제를 이식했다.

소련의 지원으로 정부를 수립한 북한 관료들은 이윽고 독자적인 국가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급속한 공업화를 이룩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무자비한 희생이 강요됐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불만을 제압하고자 억압기구가 비대해졌으며, 노동자들의 민주적 권리가 보장될 수 없었다.

이것은 북한 내에 남한처럼 계급 분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을 획일체로 여겨, 북한 내부에서 어떠한 변혁 시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서방 제국주의의 개입을 지지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주장은 틀렸다.

더 나아가 이 책은 북한 국가가 진정

한 반제국주의 세력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이] 반미언사 이면에 변화의 조짐들이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 변화를 들 수 있다."(《한반도》)

바로 이런 내용과 쟁점들을 이 두 권의 책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 입각해서 온갖 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자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민주통합당 같은 포퓰리즘적 자유주의 세력이 집권할 때 남북 간 대화로 평화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경계를 촉구한다. 1999년 서해교전 직후 김대중은 "대북 포용 정책이 단순히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임이 입증됐다" 하고 말했다. 이런 모순된 정책으로는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기 어렵다.

"경쟁과 축적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들 사이의 영속적인 평화는 있어 본 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진정한 평화는 남북 지배 계급 모두로부터 독립해 이들에 맞서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한반도》)

김영익

간판과 얼굴만 바꾸고 있는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서 NGO 출신 진보인사들과 친노 경향의 젊은 후보들이 선전하면서 이 당의 간판과 얼굴이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내용물은 민주당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 비대위에게 구명줄을 던지며” 국회에 등원했을 뿐 아니라, 예비 경선 과정에서도 진보적 요구와 정책은 쟁점이 되거나 두드러지지도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 쪽으로 뒤틀림”을 치고 “민한당[전두환 정권 시절 관제 야당]이 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의 비판은 공감을 얻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국회에 등원하면서 한미 FTA 발효를 전제로 한 피해대책입법을 한나라당과 합의한 것은 이정희 대표의 지적처럼 “발효되기도 전에, 발효 중단 싸움을 포기”한 것이다. 또, 박근혜의 사회복지기본법 제정에 합의해 줘, 박근혜식 ‘맞춤형 복지’에 힘을 실어 줬다.

게다가 민주통합당은 개인정보 침해와 주민 감시·통제에 이용될 수 있는 전자주민증 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다.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진보정당 후보들에게는 불리한 석패율제와 조중동 종편에 타협하는 미디어웹 법안 도입에도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빈사상태

이처럼 민주통합당은 권력을 맡을 만한 ‘책임 있는 야당’이라는 점을 지배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빈사상태에 빠져 있던 한나라당과 이명박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 주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이 추진을 약속했던 룬스타 국정조사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한나라당과의 합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외환은행을 룬스타에 매각할 당시에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 협상했으니, 제발목을 잡을 합의를 할 리가 애당초 없었다.

한편,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혁신과 통합’ 출신 진보인사들은 이런 행보를 막는 데서 별 구실을 못하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 나간 진보인사 중 한미 FTA 무효화 투쟁을 내건 사람은 아무도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 거의 모든 후보가 ‘한미FTA 반대 투쟁’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없었다.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뒤집으려는 진지한 시도도 없었다.

‘혁신과 통합’ 출신 진보인사들이 민주당의 ‘혁신’을 이루기는커녕 민주당이 혁신하고 있는 양 치장해 주는 장식물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따라서 이정희 대표 등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정희 대표는 “MB 악법과 4대강 예산, 한 EU FTA 같은 야권연대의 중요한 고비마다 민주당은 쉽게 약속하고 쉽게 여기는 일을 반복해 왔다”고 옹계 비판했다. 사실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야권공조에 치중해 민주당에 대한 이런 비판을 삼가 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과 석패율제까지 합의하면서 진보정당의 득

표·의석 확대에 재를 뿌리자 태도가 바뀐 듯하다.

반갑게도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의 등원 합의를 비판하면서, 당분간 등원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올바른 태도가, 단지 총선을 위한 야권연대 협상에서 민주통합당에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그쳐서

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민주통합당과 협력할 수도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앞으로도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을 삼가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디도스, 측근 비리 등 이명박 정부의 추문을 들춰내며 투쟁을 호소하고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강동훈

박원순의 개혁이 전진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 가장 핫했던 뉴스로 박원순 시장 당선을 꼽았다(‘잡코리아’ 설문). 부패와 불의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박원순 시장의 따뜻하고 개혁적인 행보에 사람들이 보내는 기대가 크다. 실제로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이 확정돼 내년부터 한 학기에 1백2만 원으로 학교를 다닌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시절 주요 직책을 맡았던 1급 공무원들을 대거 물갈이 한 것도 잘한 것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하려면 인적 쇄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혁이 확대·발전하길 바란다. 그런데 최근 박원순 시장의 개혁을 보면 다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2012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후퇴가 있었다. 물론 서울시 예산안에는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과 공공임대 주택 예산 등 복지 예산이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압력 때문에 애초 박원순 시장이 낸 안과는 다르게 한강르네상스 후속 사업비 등 오세훈

시절부터 추진해 온 토건 사업 예산도 포함됐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후퇴에 끝까지 분명히 반대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하고 노동자들 복지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겠다고 말했지만 오른쪽의 반대 때문에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때문에 우석훈도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대로 가면 박원순도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며 걱정어린 충고를 했다.

박원순 시장이 민주통합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에도 무원칙하게 국회에 등원하며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민주통합당이 과연 박원순 개혁에 도움이 될지는 의심스럽다.

박원순이 추진하는 개혁은 그를 지지한 노동계급과 청년 세대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자신감을 줬다. 이명박 정부와 우파의 방해로 물리치려면 이런 대중의 열망을 진정된 대중 행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선영

중국 광둥성 우칸촌 투쟁의 승리

“이것은 승리의 시작이다”

네 달 동안 부패한 지방 정부에 맞서 싸운 중국 광둥성 루핑시 우칸촌 주민들이 정부에게서 중요한 양보를 얻어 냈다.

시 정부는 우칸촌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감옥에서 숨진 주민 대표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또, 수감된 다른 주민 대표들을 석방하고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촌락 위원회를 인정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적으로 약탈된 토지 반환과 부패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하겠다는 모호한 약속을 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마을 주민 2만여 명이 막강한 독재 국가에 맞서 싸워 큰 양보를 얻어 낸 것은 대단한 성과다. 특히 공산당 정부가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민중의 독립 기구를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칸촌 주민대표인 린주렌은 “이것은 승리의 시작이다” 하고 말해 높아진 자신감을 보여



“우칸 투쟁 지지한다” 우칸촌 투쟁 소식은 중국 곳곳으로 퍼져 나갔고 연대 시위도 벌어졌다.

줬다.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자본가들과 결탁해 민중을 억누르는 지방 정부들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대변하는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우칸촌 주민들은 자신들의 투쟁 소식을 외부에 알리고 지지를 얻으려고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주민들은 투쟁을 지지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먹을 것을 제공했다. ‘비밀 루트’를 따라 외신 기자들을 마을 안으로 안내했고, 이들을 통해 우칸촌 투쟁 소식은 중국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우칸촌 주민들의 단호한 투쟁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도 투쟁에 나섰다. 심지어 어떤 마을은 우칸 투쟁에서 배우려고 대표단을 보냈다.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 성명을 조직한 홍콩 반자본주의 단체 ‘레프트21’의 활동가 나포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양보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성격의 투쟁이 동시에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둥성 하이먼에서는 3만 명 이상이 투쟁을 벌였고 대다수 경찰 병력이 이웃 우칸촌에 집결해 있었던 덕분에 하이먼 주민들은 지방 정부 청사를 점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먼 주민들은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가 주민 동의 없이 건설되는 것에 반대해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투쟁이 확산되자 정부는 신속히 우칸촌 주민들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하이먼 주민들에게도 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양보해야 했다.

광둥성에는 중국 최대 수출 공업단지가 있다. 최근 광둥성에서는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에 항의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우칸은 1920년대 중국 공산당이 농민들을 조직한 최초의 장소 중 하나다. 당시 농민 투쟁은 노동자 투쟁과 결합돼 기존 체제를 뒤흔들었다. 오늘날 중국 지배자들은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매우 두려워한다.

김용욱

아랍 혁명의 출발과 전개를 돌아본다

2012년 1월은 아랍 혁명 1주년이 되는 달이다. 1년 전, 튀니지에서 독재자 벤 알리가 쫓겨나고, 이집트에서 혁명이 시작됐다. 아랍 혁명은 세계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아랍 민중이 제국주의와 부패한 독재자들의 아랍 지배 체제를 타격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아랍 혁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혁명 1주년을 맞아 혁명의 전개 과정과 의의를 돌아 보며 교훈을 찾는다.

2010년 12월 18일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혁명을 알리는 봉화가 피어올랐다. 혁명의 봉화는 곧 이웃 나라들로 이어졌다. 2011년 1월에는 알제리, 레바논, 요르단,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서, 2월에는 예멘, 바레인, 리비아, 쿠웨이트, 모로코에서, 3월에는 시리아에서 대중 시위와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의 초기 속도는 그야말로 “허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튀니지에서는 20여 일 만에, 이집트에서는 18일 만에 독재자를 끌어내렸다.

아랍 혁명은 단박에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사회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아랍 혁명은 책에서나 보던 혁명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여 줬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을 지켜보느라 밤잠을 설쳤고, 낮에는 혁명을 지지하고 연대를 보내는 행동을 조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아랍 혁명의 불씨를 댕긴 것은 무함마드 부아지지라는 한 청년의 죽음이었다. 부아지지는 노점을 하지 못하게 괴롭힌 경찰에 분노해 분신했다. 그의 죽음은 비슷한 처지에 있던 튀니지 민중이 커져이 쌓인 울분을 터뜨리게 한 계기가 됐다.

시위는 시디 부지드에서 시작됐다. 독재자 벤 알리는 부아지지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을 지원하겠다고 양보 제스처를 보였지만, 시위에는 폭력으로 대응했다. 튀니지 혁명 과정에서 2백 명이 넘게 사망했다.

그러나 양보 제스처도, 탄압도 통하지 않았다. 시위 물결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1월 12일 수도 튀니스에 당도했다. 시위대는 “민중은 정권의 몰락을 원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전통적으로 벤 알리를 지지하던 튀니지 노동연맹(UGTT)도 혁명의 편으로 돌아섰다. 1월 14일 벤 알리는



행진하는 튀니지 노동자들 아랍 혁명에서 노동계급의 등장은 혁명 1막의 승리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쳤다. 23년 독재자가 쫓겨나는 것을 보며 아랍 민중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를 깨달았다.

광장 점거

그 다음은 이집트였다. 이집트 혁명은 지금까지 일어난 아랍 혁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이다. 아랍 세계 “모든 계급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이집트는 언제나 아랍 세계의 경제적·정치적 중심지였고 이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1월 25일 카이로의 이곳저곳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경찰의 봉쇄를 뚫고 타흐

리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시위 모델이 된 타흐리르 광장 점거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3월 20일 이집트 민중 4만 명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해 타흐리르 광장을 하루 동안 점거했다. 이 경험은 2011년 혁명의 예행 연습이었다.

1월 25일 이후 18일 동안 광장을 탈환하려는 편과 광장을 사수하려는 편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무바라크 정권은 경찰과 강패들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하려 했다.

이집트 민중은 맨몸으로 중무장한 경찰과 강패들에게 맞섰다. 이집트 민중

은 “승리 아니면 죽음”을 각오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던 시위대는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점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지난 10여 년간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지지 운동, 반전 운동, 민주화 운동, 노동자 운동을 조직하며 경험을 쌓아 온 활동가들의 구실이 컸다.

타흐리르 광장에 군대가 배치됐지만 군 수뇌부는 진압을 명령하지 못했다. 그랬다가는 군대가 분열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집트 군의 사병과 하급 장교들은 징집병인데, 이들은 혁명 세력과 큰 동질감을 느꼈다. TV 인터뷰 등에 나와 공개적으로 혁명을 지지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승리 아니면 죽음”

드디어 이집트 노동계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월 8일 수에즈 운하 노동자 1천 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섬유·철강 노동자들이 가세했다. 2월 10일에는 북부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남부의 아스완까지 노동자 파업이 확산됐다.

마침내 이집트 군부와 지배계급은 무바라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2월 11일 30년 독재자 무바라크는 권좌에서 밀려났고, 최고군사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2월 15일에는 튀니지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리비아에서 혁명이 시작됐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독재자들보다 더 완강했다. 카다피는 군대의 일부도 아들들을 통해 직접 통제하고 야당 세력을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정권에 맞선 혁명은 훨씬 더 원초적인 모습을 보였다.

혁명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저항 세력은 2대 도시 벵가지를 장악했다. 군대가 분열해 이 과정을 도왔다. 반란의 물결은 수도 트리폴리까지 달았다. 전국 곳곳에서 혁명위원회들이 건설돼 치안과 식량 배급과 복지 등을 책임졌다. 혁명위원회들은 전국적 네트워크인 전국위원회를 결성했다.

카다피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전투기, 군함, 탱크까지 동원했다. 정권의 막강한 화력에 2월 27일 트리폴리 항쟁이 결국 진압되고 카다피의 강력한 탄압에 대응하면서 항쟁은 무장봉기로 바뀌었다. 이

때부터 리비아 혁명은 튀니지·이집트와 다른 길을 가게 됐다.

튀니지·이집트 혁명에 뒤늦게를 맞은 서방은 혁명의 편인 척하며 리비아 혁명에 개입했다. 3월 19일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는 폭격을 시작했다. 이는 “학살”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서방 제국주의는 이 지역에서 패권을 재확인하고자 할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과도국가위원회(NTC) 내부에서 친서방적인 카다피 정권 이탈리아의 입지가 강화됐다.

그 뒤 여섯 달 동안 전투가 이어졌다. 이윽고 8월 말 카다피가 장악하던 지역에서 반란이 다시 일어났고 저항세력이 트리폴리로 진격했다. 두 달을 도망 다니던 42년 독재자 카다피는 10월 20일 저항 세력에게 잡혀 목숨을 잃었고, 10월 23일 공식 해방이 선언됐다.

독재자들이 쫓겨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대중 시위가 일어났고 정권을 뒤엎혔다.

예를 들어, 홍해와 아덴만 입구에 있고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친서방 국가 예멘의 대통령 살레는 대중의 압력에 밀려 몇 달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살레는 다시 예멘으로 돌아와 운동을 강하게 탄압했지만, 결국 11월에 권력이 양안에 서명했다.

대략 3월 이후 주류 언론에서 아랍 혁명 소식은 뜸해졌다. 그러나 아랍 혁명은 멈추지 않았다.

모로코에서는 7월까지 시위가 격렬했고 쿠웨이트에서는 11월 28일 내각이 총사퇴했다. 요르단, 예멘, 바레인, 시리아에서는 지금도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 혁명이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집트 민중은 수십 년 동안 고문과 불법 감금·살인을 저지른 국가안보국을 해체시켰다. 이집트 노동자들은 독립노조를 결성하고 경제적·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

무바라크 몰락 이후 파업 건수와 파업 참가 노동자 수가 2006~2009년 파업 때보다 훨씬 더 많다. 최근에는 반혁명적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군부에 맞선 저항이 본격화하고 있다.

차승일

읽어 보시다

아랍 혁명을 깊이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존 몰리뉴는 2011년이 1848년이나 1968년과 비슷한 혁명과 반란의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이 역사적인 해의 정치적 달력은 2010년 12월 17일 시작된다고 썼다.

그날 튀니지의 청년 노점상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횡포에 항의하며 분신 자살한 후 한 달이 채 안 돼 튀니지 독재자 벤 알리가 쫓겨났다.

열흘 남짓 후에는 이집트에서도 독재자 무바라크에 반대하는 대중 시위가 시작됐다. 민중항쟁이 시작된 지 18일 만인 2월 11일 무바라크도 권좌에서 쫓겨났다.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은 바로 이러한 아랍 혁명의 초기 과정을 소개하며 그 의미를 다루고 있다.

민중 반란의 물결은 리비아·예멘·바레인·이라크·요르단 등 중동 전역으로 번져갔다. 놀라고 겁먹은 각국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 알렉스 캘리니코스, 이집트 사회주의자 외, 책갈피, 176쪽, 8천 원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 알렉스 캘리니코스, 이집트 사회주의자 외, 책갈피, 176쪽, 8천 원
혁명이 계속된다 이집트 혁명 1주년 기념 《혁명이 계속되다: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2》 알렉스 캘리니코스, 사메 나기브 외 지음, 책갈피, 304쪽, 1만 2천 원	《혁명이 계속되다: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2》 알렉스 캘리니코스, 사메 나기브 외 지음, 책갈피, 304쪽, 1만 2천 원
마르크스 21 9월 21일 《마르크스21》 9호 2011년 봄, 아랍 혁명 특집호 책갈피, 360쪽, 1만 6천 원	《마르크스21》 9호 2011년 봄, 아랍 혁명 특집호 책갈피, 360쪽, 1만 6천 원

지배자들은 한편으론 당근을 내놓고 한편으론 채찍을 휘둘러 현상 유지를 꾀했다.

카다피의 잔혹한 탄압으로 리비아 혁명이 주춤하자 제국주의 열강이 ‘인도주의적 개입’을 구실로 혁명의 물결을 잠재우려고 나섰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레인에 군대를 보냈고 예멘과 시리아 정부는 탱크를 동원해 민중을 학살했다.

이런 아랍 혁명의 다양한 역사·정치·경제 배경과 나라별 맥락을 다룬 논문들을 모은 《마르크스21》 9호(2011년 봄, 아랍 혁명 특집호, 책갈피, 360쪽, 1만 6천 원)도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리비아 민중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카다피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고(비록 서방의 개입으로 일그러지고 뒤틀린 혁명의 낙인을 제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지만), 예멘에서도 독재자 살레가 마침내 권좌에서 물러났으며, 시리아에서도 드디어 노동자들의

집단지적 투쟁 조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랍 혁명이 보여 준 저항 정신은 스페인 광장 점거 투쟁, 그리스 노동자 총파업, 미국 ‘점거하라’ 운동에서도 거듭 나타났다.

“단 몇 주 만에”

지금 이집트 혁명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전진하고 있었다. ‘무바라크 없는 무바라크 체제’인 최고군사위원회는 어떻게든 혁명을 중단시켜 자신들의 기득권과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민중의 정치·사회 의식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최고군사위원회의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다. 이집트 혁명의 구호였던 “승리할 때까지(계속) 혁명”을 추구하는 민중과 반혁명 세력이 오랫동안 얹치락뒤치락을 거듭할 공산이 크다.

혁명 초기 이후 과정을 정리하며 이런 최신 상황을 평가·분석한 것이 《혁명이 계속되다: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 2》이다.

러시아 혁명이 레닌은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일이 단 몇 주 만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1년이야말로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일이 단 몇 주 만에 일어난” 혁명의 해였다.

이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제대로 파악·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올바르게 전망하는 데 꼭 필요한 나침반 같은 책이 여기 소개한 세 권의 책이다. 아울러 《마르크스21》 12호에 실린 사메 나기브의 감동적인 글 “계속되는 혁명 — 무바라크 몰락 이후의 이집트”도 함께 읽어볼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이수현

아랍 혁명은 무엇을 보여 줬는가

아랍 민중은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실히 보여 줬다.

20~30년 묵은 독재자들을 몰아내고, 수십 년 동안 두려움의 대상이던 보안 기구들을 해체하고, 지배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며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 사회를 바꿀 힘이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무엇보다 혁명이 한 무리 공상가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아랍 혁명이 일어난 뒤 미국 위스콘신에서 노동자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고, 유럽 노동자들의 반긴축 투쟁도 힘을 얻었다. 스페인에서는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 점거를 본뜬 광장 점거 운동이 일기도 했다. 절정은 미국 ‘점거하라’ 운동의 제안으로 10월 15일에 열린 국제 공동행동의 날이었다.

이 운동들은 모두 2008년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한다. 사실 경제 위기가 운동에 끼치는 영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 사람들을 저항에 나서게 할 수도 있고 의기소침케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랍 민중의 용기와 투지, 승리는 전 세계 민중에게 싸울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아랍 혁명은 지배자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아랍 혁명으로, 특히 이집트 혁명으로 서방 제국주의는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은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를 축으로 중동 지역을 지배해 왔다. 이집트 혁명으로 미국의 중동 지배 축 하나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좀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국경을 봉쇄한 덕분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봉쇄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전략이 틀어지게 됐다.

아랍 혁명은 노동계급의 힘과 중요성도 확인시켜 줬다.



사진 출처: Mosaab Elshamy

반군부 시위가 힘을 키워 가고 있다. 평범한 사병과 하급 장교들도 혁명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대중파업이 필요하다.

특히 이집트 혁명에서 노동계급의 구실은 중요했다. 혁명의 물결이 마할라와 수에즈 등 작업장으로 확산된 것은 무바라크를 몰아내는 데서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그 뒤에도 이집트 노동자들은 경제적·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벌이고, 독립노조를 건설하고,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며 혁명을 심화시켰다.

지난 1년 동안 이집트 혁명이 심화하는 과정은 폴란드 출신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 준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1905년 러시아 혁명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 행동의 물결이 고양된 뒤에는 언제나 수많은 경제투쟁의 싸움 따르는 기름진 퇴적물이 남고, 또 그 역도 마찬가지다.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이 휴지기를 맞이할 때마다 노동자들을 지탱해 준다. 말하자면,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에 언제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노동계급 역량의 마르지 않는 저수지다.”

가변성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은 무바라크 퇴진 이후 거리 시위가 잠시 잠잠해진 동안에도 혁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핵심 원동력이었고, 군부에 맞선 투쟁이 다시 일어나는 데서 발판 구실을 했다.

이런 노동자 운동의 진출은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의 연속혁명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트로츠키는 러시아 같은 상대적 후진국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노동계급밖에 없고, 노동계급의 주도적 구실로 맡기 않아 민주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의 주장에 따르면, 이집트의

(정치)혁명만은 사회혁명으로 이어질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이 잠재력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현실은 기계와 달리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은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세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집트 노동계급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지금껏 이룬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무바라크는 타도했지만 평범한 이집트 대중의 실제 삶은 그리 나아진 것이 없다. 단적으로 아직 무바라크 시절의 계엄령도 해제되지 않았다. 이집트 군부는 무바라크 없는 무바라크 체제를 고수하려고 한다.

또한, 무바라크를 표적으로 삼았을 때는 많은 세력들이 단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대표적으로 무바라크 시절 최대 야당 세력이었던 무슬림 형제단은 혁명을 멈추고 싶어 한다. 독재

자 타도로 혁명의 과업을 완수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 선출한 정부가 군부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게 하고, 민중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혁명은 더 진척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집트 사회주의자들의 구실이 매우 중요하다.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단체’(RS)는 소규모이지만 혁명에서 긍정적 구실을 했다. 2월 혁명 기간에도 타흐리르 광장을 방어하고 혁명을 노동자들에게 확산시키는 활동을 했고, 초기부터 군부를 민지 말아야 한다고 옹계 주장했다. 이 덕분에 RS는 이집트 민중에게서 신뢰를 얻어 가고 있다.

이집트 사회주의자들은 현재 군부에 맞서 일어나는 투쟁에서 올바른 전략·전술을 제공하며 운동을 승리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다.

차승일

혁명 조직의 구실을 두려워하는 이집트 국가

앤 알렉산더 영국 사회주의자, 중동 전문가

이집트를 지배하는 장군들과 작업장과 거리에서 혁명을 심화시키려고 투쟁하는 활동가들 사이의 충돌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영 언론과 살라피주의자들의 TV 방송국은 가장 중요한 극좌파 조직인 ‘혁명적 사회주의자단체’(RS)를 공격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살라피주의자인 TV 토크쇼 사회자는 최근 몇 주 동안 무하메드 마무드 거리에서 벌어진 군과 경찰에 맞선 투쟁에서 주도적 구실을 한 RS를 비난했다. 그들은 RS가 “CIA의 자금을 받는 아나키스트들”이라고 공격했다.

곧이어 국영 방송국인 나일 TV는 최근 카이로의 ‘사회주의 연구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영상을 편집해 보도했다.

이 모임에서 RS의 주도적 활동가인 사메 나기브는 이집트 혁명이 성공하려면 대중 운동이 이집트 군과 국가를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류 언론들은 바로 이 발언을 콧 집어 공격했다. 나기브의 주장은 구질서를 복원시키려고 공개적으로 모의하는 장군들과 옛 정권 인사들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주장은 혁명 이전에 야당 진영에 속했던 다른 정치 세력들—특히 이슬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에



사진 출처: Mosaab Elshamy

이집트 국영 언론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단체’에 대한 공세 강화는 이집트 혁명에서 그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게도 도전하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더 많은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모색하고 있다.

영향력 있는 정치 토크쇼 사회자인 모나 엘사즐리는 <저녁 10시>란 프로그램에서 RS의 활동가인 호삼 엘하말라위를 인터뷰했다.

엘사즐리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혁명은 정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전복하자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엘하말라위는 이렇게 반박했다. “만약 그것이 음모라면 많은 이집트인이 그 음모에 참가하고 싶어 합니다.

“이집트 전역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호응하고 있고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이집트 군을 포함하는 현 이집트 국가 기구가 이집트 민중에게 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이 타흐리르 광장과 지방의 점거 참가자와 시위대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집트 군은 이집트인들을 고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은 무바라크의 군이지 이집트의 군이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누가 정말 미국에게서 해마다 13억 달러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최고군사위원회입니다.”

RS를 공격하는 언론 캠페인은 이전의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 얼마 전에 언론들은 외국 돈을 받는다니서 4월 6일 청년

운동’을 비난했고 어떤 이는 이 운동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10월 9일 군이 콥트교 시위대와 지지자들을 학살한 직후 블로거인 알라 압델 파타를 연행한 것도 비슷한 시도였다.

최근 2주 동안 이집트 국영 언론들은 타흐리르 광장의 시위 참가자들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독립 언론들은 이런 중상모략에 맞서 반격하고 있다.

<타흐리르>는 일면 헤드라인 제목을 “거짓말쟁이들”로 잡았다. 제1면의 배경 사진은 한 여성 시위 참가자가 병사들에 의해 옷이 벗겨진채 끌려가는 모습이였다. 여성 시위 참가자들은 이 신문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많은 학생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아인 샴스 대학 학생들은 국방부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그들은 군부 통치의 종식과 군이 살해한 동료 학생을 위한 정의를 요구했다.

동시에, 노동자 시위와 파업 건수도 다시 증가하고 있고, 일부 노동자 투쟁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급진화하고 있다.

12월 중순 해고된 시멘트 공장 노동자 수백 명이 일자리를 요구하며 국영 시멘트 공장을 점거했다.

사유화된 비누와 석유 공장 다섯 곳의 노동자들은 기존 경영진을 몰아내고 공장의 재국유화를 선언했다.

최근 이집트 국가는 시위대를 무자비

하게 공격했다. 국가 기구 안에는 사메 나기브나 호삼 엘하말라위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싶어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거리와 대학 캠퍼스 등에 쉽게 억누를 수 없는 강력한 운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중적 혁명 운동과 최고군사위원회 사이의 투쟁이 격화될수록 조직 노동자들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

사메 나기브는 앞서 인용한 모임에서 이 점을 잘 지적했다. “우리는 대중 파업과 총파업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군부를 뿌리째 뒤흔들고 궁극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병과 하급 장교들도 혁명의 편으로 끌어들이어야 합니다. 광장 농성만으로는 힘이 충분치 않습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83호 / 번역: 김용욱



살라피주의자

코란 연구나 종교의식에 몰두하는 독실한 무슬림들이다. 명확한 정치적 목표가 없어 무바라크 정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후원을 받고 있다. 2011년 7월 이슬람주의자 공동 집회를 처음 제한했으며 이를 계기로 무슬림형제단이 점해 온 정치 공간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유

노동자들이 투쟁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급의 중요성과 힘에 대한 회의가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노동자들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며 단결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갖기도 한다. 폴 블랙리지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폴 블랙리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리즈 메트로폴리탄 대학 정치학과 교수

노동계급이 세상을 바꿀 힘을 가졌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그가 사회주의 이론에 한 가장 중요한 기여다. 마르크스 이전에는 노동자를 기껏해야 체제의 희생자로 간주했고 보통은 문명을 위협하는 무리로 취급했다. 마르크스는 이런 생각들에 반대했고, 자유를 바라는 노동자의 집단적 투쟁이 아말로 잠재적으로 자본주의에 맞선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이런 주장은 곧 비판 받는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주장들은 흔히 엉뚱한 곳을 겨냥한다. 마르크스의 계급 모델을 주류 사회학적 관점들(계급을 사회적 계층화, 다시 말해 수입·신분·직업·소비 행태에 따라 사람들을 구별하는 다양한 방식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에 접점 거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 이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교사, 공장 노동자, 저임금의 삼정 점원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 묻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계급 투쟁이라는 낡은 방식은 예전만큼 유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계급 내부의 차이가 복잡해진 탓에 계급에 호소하는 것은 더 쓸모없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노동자 내부의 차이를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은 계층화와 광범한 착취 과정을 따로 떼어 놓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반대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복잡한 착취 과정이 어떻게 노동자 안에 무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수입·직업·신분 등의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의 관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보여 줬다.** 계급을 계급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공통의 관계들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착취 모델이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 하여금 노동계급 내부의 차이를 무시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착취 모델은 이런 분열을 극복하는 연대를 형성할 물질적 기초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마르크스의 방법

마르크스의 계급 연구 방식을 잘 이해하려면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것은 어떤 범주로도 가능할 태지만, 특히 마르크스는 우리 조상들이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자연을 변화시키려 한 사회적이고 목적의식적인 노동을 통해 자연 세계와 자신을 구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던 것이 바로 신석기 혁명이다.

신석기 혁명은 지금으로부터 8천~1만 년 전에 일어났다. 이제까지 자연에서 식량을 채집하며 살아온 여러 인간 집단들이 이때 비로소 오래된 생활 방식과 단결하고



직종, 수입, 성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적 착취에 저항하고 착취 자체를 없앨 민주적 대안을 요구해야 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농부가 된 후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 처음으로 잉여를 체계적으로 생산해야 했다. 예를 들어 흉년에 대비해 곡물을 보유해야 했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 문제를 낳았다. 누가 잉여를 통제할 것인가? 매우 긴 이행기를 거쳐 소수가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이 생산한 잉여를 영구히 통제하게 됐을 때, 비로소 계급이 (국가, 여성 억압과 더불어)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계급은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특징이 아니다. 오히려 계급은 역사적으로 한 집단이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사회적 잉여를 통제할 권한을 획득한 특정한 관계가 나타난 시점에서 형성됐다.

이와 같은 계급 연구 방식은 세 가지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마르크스는 지배 계급이 생산자로부터 잉여를 뺏아내는 여러 방식들을 조사·분석해 역사를 시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봉건 영주가 농민을 착취하는 방식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과 다르고, 이 때문에 봉건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 갈등은 그 형태가 다르다.

둘째, 계급의 기원과 착취 방식에 대한 분석은 계급 철폐에 필요한 조건을 규명한다. 다시 말해 엘리트가 통제권을 쥐는 것을 허용할 만큼의 잉여는 존재하지만 이런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에는 부족할 때 계급이 나타나고, 계급 분열을 극복할 가능성은 이런 혜택을 일반화할 수 있는 지점까지 잉여가 늘었을 때 형성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이미 그런 조건을 마련했음을 보여 줬다. 셋째, 마르크스는 잉여 생산을 계급 모델의 기초로 삼아 자본주의 경제 내부의 매우 다양한 기능들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설명했다.

실제로 자본주의적 계급 관계에 관한 마르크스의 개념은 그의 역동적인 자본 축적 모델에 입각할 때만 타당하다. 자본주의는 직접 생산자(농민)가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프롤레타리아', 다시 말해 노동시장에 자기의 노동 능력을 팔아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 됐을 때 나타난 세류고도 매우 역동적인 생산양식이다.

이런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를 통해 자본주의가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가장 통제 불가능한(마르크스는 이를 '소외'라고 불렀다) 사회 체제가 된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농민 생산

농민 생산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것은 농부들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한 덕분이었다. 다시 말해 농부들은 대부분 자급자족을 했고(일부는 영주한테 세금으로 바쳤다) 그 외 필요한 것들은 소량의 물물교환과 시장 거래를 통해 보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임금노동에 기반을 둔 체제에서 노동자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나서야 한다. 임금지 잉여가 늘었을 때 형성된다는 것이다.

노동의 이런 특성 덕분에 자본가는 수익이 낮은 부문에서 수익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을 재분배할 수 있다(한 부문에서는 정리해고를 하면서도 다른 부문에서는 고용을 늘리는 식으로).

더욱이 시장에 따라 팔려고 생산하는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노동은 가장 생산성 혁신을 잘 하는 자본가에게 이동하게 되곤 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하에서 임금노동은 노동 생산성이 증대되는 경향을 강화한다.

비록 마르크스가 임금노동과 자본주의 체제의 역동성 사이의 관계를 상당히 많이 다루긴 했지만, 그는 《자본》 3권에서 계급을 본격적으로 정의하려 한 부분을 마치지 못했다. 그래도 마르크스는 계급 모델을 재구성할 충분한 재료를 남겼다.

레닌도 그런 작업에 뛰어들어 중요한 기여를 했다. 레닌은 계급을 관계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능력을 팔고 자본가는 그 능력을 산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의 가장 큰 장점은 결보기에 서로 다른 직업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이다.

불행히도 그것은 완전히 만족스러운 모델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대 자본주의는 노동자처럼 흔히 자신의 노동 능력을 팔지만,

노동자와 달리 착취당하지 않는(사실 타인을 착취하는 데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상급 관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된다. 또 중간 관리자나 특정 전문 직업인 등 생활 조건이 위로는 자본가들과 겹치고 아래로는 노동자들과 겹치는 다른 집단도 존재한다.

자본주의적 노동 과정의 복잡성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는 이런 '신중간계급'은 주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돕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이 겪는 것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압력을 받기도 한다.

사회적 착취 과정의 복잡성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을 가장 정교하게 재구성했던 것은 《고대 그리스의 계급 투쟁》이라는 역작을 쓴 에프리드 생 크루아다.

"계급은(본질적으로는 일종의 관계인) 착취라는 사실의 집단적인 사회적 표현이자, 사회 구조 내부에 착취가 구현되는 방식이다. ... 계급은 ... 공동체 내부에서 사회적 생산 체제에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다."

착취

일단 계급을 복합적인 착취 과정으로 이해하고, 또 자본주의를 아주 역동적인 생산양식으로 보면,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어떻게 노동계급 구조의 끊임없는 변화를 낳는지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제조업의 사례를 보자. 영국에서 제조업 노동자들은 예전만 한 사회적 비중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음에도 노동 생산성이 증대하자, 2007년 영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것은 제조업 노동자들의 절대적 숫자가 비록 감소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객관적으로는 더 큰 힘을 가지게 됐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현대의 노동자들이 이전 시대 노동자들보다 더 고도의 숙련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변화가 낳은 결과 가운데 하나는 현대 노동자가 받는 정규 교육의 수준이 과거의 노동자가 받았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옛 교육이 엘리트 계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오늘날 정규 교육은 거의 모든 일자리에 필수 전제 조건이 됐다. 기본적인 읽고 쓰기와 계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최소한의 목적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과정은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첫째, 노동자들이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과거의 대

다수 지배자들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교육을 현대의 노동자 대다수가 받고 있다. 이런 교육 덕분에 노동자들은 전체 사회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됐다.

둘째, 교육 제도를 자본 축적 과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육자들이 어떻게 다른 노동자들과 관련되는지 알 수 있다. 산업이 교육받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므로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기술을 획득하고 자신감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는 과거의 교육 형태와 질적으로 다른 기능을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사는 교육받은 노동자들을 생산 과정에 내보내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임금노동자로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과 다른 노동자들의 생활 경험을 갈수록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해 교사들은 효율성을 높여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하려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는다.

보건이나 사회 복지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교육받은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싼 자원이므로, 질병 파위 때문에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쫓겨나도록 그냥 두는 것은 낭비다.

그러므로 교육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보건과 사회 복지 제도들도 착취 과정에 매우 필수적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자본 축적 과정을 유지하는 데서 이런 제도들이 하는 구실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서 일하는 간호사·사회복지사·행정 직원 등도 노동계급의 일부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보건 시스템이나 교육 제도가 순전히 자본의 필요를 충족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운동은 이런 제도들이 자신의 기능을 확대해야 하고 수익성 신장에만 몰두하는 자본의 협소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이런 구조들은 본질적으로 자본의 필요에 맞춰 성장했으므로 이 분야에서 일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불렀듯이 '집합적 노동자'로 이해해야 한다.

공통의 이해 관계

이런 관점을 일반화하면,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각자 직위가 다르고 임금 수준이 다름에도, 그들은 모두 착취 받는 집합적 노동자의 일부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동일한 압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계급이게는 (진

단적으로) 자본주의적 착취에 저항하고 착취 자체를 없앨 민주적 대안을 요구해야 할 공통의 이해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자본가들은 그런 착취 과정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자들이고, 착취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관료들(경영자·법관·보수 언론·경찰·군대 등)로 겹겹이 둘러 쌓여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자본가가 착취 과정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시장을 위한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외된다. 왜냐하면 경쟁 자본들 사이의 맹목적이고 무계획적인 경쟁이 지배하는 체제를 자본가들이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을 소외시킨 다곤 하지만, 자본가들은 착취 과정을 통제하며 혜택을 누릴 뿐 아니라 소외의 과정을 자유와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경험한다. 그와 반대로 노동자들은 착취받고 소외를 겪으면서 고통감을 느낀다.

이런 차이는 적대적 관계를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단순히 계급 분열(계층화)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계급 투쟁의 체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착취는 집합적 노동자의 일부인 다양한 노동자들 사이에 객관적인 유대 관계를 만들지만, 자본가들과 그들이 체제를 손조롭게 운영하기 위해 의지하는 자들, 다시 말해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자인 부하린이 '집합적 착취자'(물론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라고 부른 자들과 [노동자들 사이에는]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 낸다.

일단 착취 관계에서 기원하는 계급 투쟁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bone 자리잡고 있음을 인정하면,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내에서 특별한 힘을 갖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체제가 임금노동에 대한 착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야말로 그 체제를 무너뜨릴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왜 노동계급인가?

우리는 노동자들이 천사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들이 이윤 생산을 중단시킬 전략적 힘을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 이런 집합적 노동자들이 출현한 덕분에 생산자들이 소외된 시장 관계를

생산과 사회적 잉여의 분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다시 말해 사회주의로 바꿀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를 낭만적 대상으로 그리는 것을 거부하는 한편으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집단적 조직을 발전시키려면 자기 대열 내부의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계층화를 극복할 연대를 구축하려고 분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억압의 결과로 나타난 무수한 분열들, 다시 말해 인종차별주의·성차별주의·동성애 혐오 등을 극복하려고 애써야 한다. 노동계급이 흔히 이런 것들 때문에 분열하기 때문이다.

계급에 대해 사회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 문화 이론가들은 다양한 파악할 집단 사이의 차이를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집단들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자본주의적 착취 과정에 통합돼 있음을 인정한다면, 보편적 해방을 위한 토대로 인식할 수 있다. 억압을 단지 차이로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우리는 노동계급에 (넓은 의미의) 착취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계급 안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실업 상태의 '산업 예비군'과 노동력 재생산을 돕기 위해 아이와 함께 저 머물고 있는 무임 노동자들은 물론 모든 억압받는 집단 출신의 노동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 연대는 다양한 집단들을 분열시키는 모든 억압에 끊임없이 맞설 때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레닌이 사회주의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아니라 '인민의 호민관'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마르크스가 현대 노동계급을 '보편 계급'으로 부른 이유이기도 하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집단적으로 집결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봤다. 또 마르크스는 계급을 광의의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본가 계급에 맞선 투쟁 속에서 자기 해방을 얻을 것이지만, 그 해방은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 해방 과정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저항의 귀환

사회주의적 대안의 가능성은 집합적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수행하는 연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이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지를 잃은 것은 노동자 운동이 1980년대 이래 후퇴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집트에서 시작한 대중 파업이 그리스, 영국에까지 도달하면서 이런 상황을 되돌릴 가능성이 창출됐다. 반자본주의자들은 노동자 운동과 연계함으로써 이런 과정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은 반자본주의자들이 왜 그레아 하는지에 관해 조금이나마 답했다. 노동자 연대는 자본주의를 전복할 잠재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민주적인 사회주의적 대안으로 바꿀 잠재력도 갖고 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1년 12월호 번역 정종수



지난번에 99퍼센트가 일어섰을 때 ②

1960년대 미국 민중 저항과 반전 운동

미국 ‘접거하라’ 운동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준 상황에서 미국 민중 저항의 역사와 교훈을 돌아본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1960년대 미국 민중 투쟁의 경험을 살펴본다.

1968년을 전후해 여러 나라에서 커다란 운동이 벌어졌고 그 운동은 프랑스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운동이 가장 먼저 출발하고 성공을 거둔 곳은 미국이었다.

첫 출발은 흑인 민권 운동이 끊었다. 미국 남부의 제도화된 인종차별주의에 맞선 투쟁 과정에서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SNCC)가 탄생했다.

1960년 미국 남부의 ‘백인 전용’ 식당에 흑인 대학생 네 명이 들어와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물론 그들은 거부당했다. 그들은 매일 식당을 찾았고, 나중에는 지지자들을 결집해 그 식당에 눌러앉아 버렸다. 결국 식당 주인이 굴복했다.

그들 스스로 ‘연좌 농성’이라고 불렀던 이 전술은 유행이 됐다. 그들은 흑인을 차별하는 버스와 터미널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극악 무도한 백인들의 린치가 뒤따랐고, 조직적인 경찰 폭력도 있었지만 그들은 승리를 거뒀다.

흑인 민권 운동은 계속 성장했고 급기야 1960년대 초에는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회 운동이 됐다.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유명한 연설로 기억된 1963년의 워싱턴 행진에는 30만 명이 이상이 참가했다.

1968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었던 톰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미국 국가가 올라갈 때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치켜올렸다. 그것은 ‘블랙 파워’식 경례였고, 승리하고 있던 반인종주의 운동의 자신감을 두고두고 상징하게 됐다.

급진화의 물결은 젊은 층의 문화와 대중음악에도 영향을 미쳤고, 역으로 히피 문화와 저항 락 음악의 성장도 저항 확대에 기여했다.

흑인 운동의 성장은 백인들이 주를 이루던 대학에서 촉매 구실을 했다.

초기부터 가장 열렬히 SNCC를 지지했던 민주사회를위한학생들(SDS)이 성장했다.

매카시즘을 겪고 위축돼 있던 미국의 기성 좌파들에 견줘 SDS는 대담함과 행동에 대한 열정이 두드러졌다.

SDS 회원이었던 제레미 브래처는 이렇게 회상한다. “SDS는 히피적이고 대담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토끼 같은 심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버클리대학에서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다.

정치 그룹의 선전과 가판 테이블을 불허했던 대학 당국에 맞선 투쟁에서 버클리 좌파들은 흑인 민권 운동의 선례를 본



사진 출처: 미 의회 도서관

1963년 흑인 민권 운동 시위대. 흑인 운동은 학생운동과 베트남전 반대 운동으로 확대됐다.

따 연좌 농성을 벌였고 작은 승리를 거뒀다.

그 후 자유언론운동(FSM)이라고 불린 운동이 등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권위주의와 싸우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들은 학내 집회를 마친 뒤 점거에 들어갔다. 저항을 노래했던 여성 포크 싱어 송 라이터 존 바에즈가 연대 공연을 왔고, 그녀의 노래에 맞춰 학생들이 대학 본부로 행진했다. 점거운동을 책임진 운영위원회가 대량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결국 난입한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갔고 다수가 체포됐다. 대학 당국과 경찰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역풍이 일어났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수업 거부 운동을 이어 나갔다. 결국 대학 내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버클리 대학 총장은 해임됐다.

이어서 반전 운동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베트남전

민주당의 존슨 정부가 베트남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했다. 전투부대가 베트남에 입성했다. 수십만 명 파병으로도 모자라 미국은 징병을 확대했다.

이제 운동은 인종주의, 언론의 자유라는 쟁점에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급진적 쟁점을 끌어들었다. 미국 제국주의는 끈질긴 베트남 전사뿐 아니라 각성한 대중과도 마주해야 했다.

급진화한 청년들은 베트남에 네이팜탄을 퍼붓는 야만적 공격을 보아 넘길 수 없었다. 이제 점거 농성은 대학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 돼 버렸다.

SDS 회원 수는 1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 주요 대학을 넘어서 소규모 공립·사립대로 확대됐다.

동시에 SDS는 좀더 직접행동주의로 나아갔다. 징병의 두려움이 기름 구실을 했다. 베트남 징집 거부 운동에 50만 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운동의 성장과 함께 약점도 드러났다. 노동계급의 참여가 너무 미약했다는 것이다. 미국 자본주의가 여전히 호

황인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보다는 미국 산업별조합회의(AFL-CIO) 지도부가 취한 보수적 태도, 미국 좌파의 공백이 어려움을 가져왔다.

미국 지배계급의 대처도 갈수록 사활적으로 변해 갔다.

인종차별과 대학의 언론 통제는 미국 민주당이 인기를 얻을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미국 지배계급도 그 문제에서는 일부 양보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위는 민주당조차 사활을 걸 만한 쟁점이었다.

모호한 반전 메시지로 인기를 얻으며 선두를 달리던 케네디의 암살은 선거라는 해결책이 확실치 않다고 느낀 미국 우파의 히스테리한 분위기의 반영이었다. 또한 이것은 위험한 반전 줄타기를 거부했던 미국 민주당 주류에게도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저항 운동가들에게 선거적 해결책이 끝났음을 상징했다.

SDS의 의장이었던 칼 오글즈비는 이렇게 말했다. “마틴 루터 킹이 4월에 죽었고, 바로 몇 달 뒤에 케네디가 죽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찰의 폭력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들도 경찰을 부추겼다.

올바른 과제와 방향의 필요성

미국의 운동 지도자들은 이제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고 올바른 과제와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사람들은 급진화 방향으로 나아갔고 SDS의 주요 지도자들은 이제 혁명적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흑인 운동 안에서도 급진파들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흑표범당(블랙 팬터)이 창당됐다.

그러나 그 급진화는 너무 모호한 강령과 전략만을 갖추고 있었고, 투쟁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약점을 보였다.

운동의 대응 방향을 놓고 무성한 주장들이 난무하는 동안 지도부는 분명한 전략과 전술을 내놓을 수 없었다.

원칙, 전략, 전술이라는 것이 단지 투쟁 속에서 아래로부터 자동적으로 탄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원칙이 확립된, 응집력과 경험을 갖춘 활동가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미국에서는 공산당이 그런 구실을 했다. 하지만 공산당은 자신 해산해 버린 뒤였다.

미국의 새로운 투쟁 조직과 리더들은 그 공백을 메우기에는 너무 빈약했다.

하지만 이 시대 미국의 운동은 현대 사회의 대규모 반 인종차별 운동, 반 권위주의 운동, 반전운동의 교과서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접거하라’ 운동으로 끈질기게 이어져 다시 저항의 꽃을 피우고 있다.

조성민



“황유미, 1985년생, 여성. 2003년 삼성반도체 기흥 공장 입사. 3라인 디퓨전 공정 세척 업무, 1년 8개월간 근무. 2005년 6월 백혈병 발병, 2007년 사망. 당시 23세.”

그녀는 세상에 알려진 첫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다.

작가는 이 건조한 기록 뒷면의 살아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했고, 책 속에 펼쳐 놓았다. 고(故) 황민웅, 김주현, 연제욱, 박지연, 이희진, 이윤정, 박진혁, 신승희, 유명화, 김옥이, 한혜경.

이들은 엄청난 노동 강도에 시달렸고, 다 파악되지도 않는 독성 물질 가득한 작업 환경에서 일했다.

삼성은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에게 몇 만 명이 일하는 공장에서 겨우 6명이 백혈병에 걸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뒤 4년이 지난 지금, 제보된 피해 사례는 1백40여 건에 이른다. 확인된 사망자는 현재 50여 명이다.

“노동자들이 무슨 약품을 사용했는지, 삼성은 몰랐을까요? 회사가 알고도 그대로 두었다면 이걸 ... 살인이에요, 살인.”

2010년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18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

보험 지급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했다.

그래도 김옥이, 송창호, 고 이숙영·황민웅·황유미 씨 유족은 굴하지 않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했고 2011년 6월 23일 마침내 고 황유미·이숙영 씨는 부분적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직업병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함께 소송을 진행한 송창호 씨는 이렇

게 말했다. “대기업하고 싸우다니, 이게 달걀로 바위 치기라고 했는데 ... 오늘 보니 바위가 깨지기도 하네요.”

그러나 판결 직후, 삼성은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피해자들은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탐욕스러운 삼성이 저지른 범죄와 그에 맞선 저항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김진석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반올림·희정 지음 | 아카이브 | 290쪽 | 1만 4천 원

‘골리앗’ 삼성에 짓밟힌 ‘다윗’들의 저항

핵안보정상회의의 ‘반대’ 운동을 건설하자

2012년 3월 26~27일에 서울에서 제2차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미국이 주도하고 47개 핵무기·핵발전소 보유국이 참가하는 이 회의의 공식 의제는 ‘핵테러 방지’다.

이들이 말하는 ‘핵테러 방지’의 핵심은 북한, 이란 등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국가들의 핵 개발과 보유를 막고 압력을 넣겠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일으킨 미국이 중동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냈듯이,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만든 슬로건이 이른바 ‘핵테러 방지’인 것이다.

실제로 이 회의가 진정으로 겨냥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나라 정부 당국자들도 애써 숨기지 않는다.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은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떨어진 원자력에 대한 신뢰 회복”(김종진 ‘원자력 인터스트리서밋’ 조직위원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주요 목표로 밝히고 있다. 일본 핵 재앙을 보고도 이 ‘죽음의 발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를 위해 정상회의 한 주 전에 세계 핵산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대규모 회의를 한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핵무기·핵발전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이 죽음과 재앙의 회의를 반대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데 핵안보정상회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진보진영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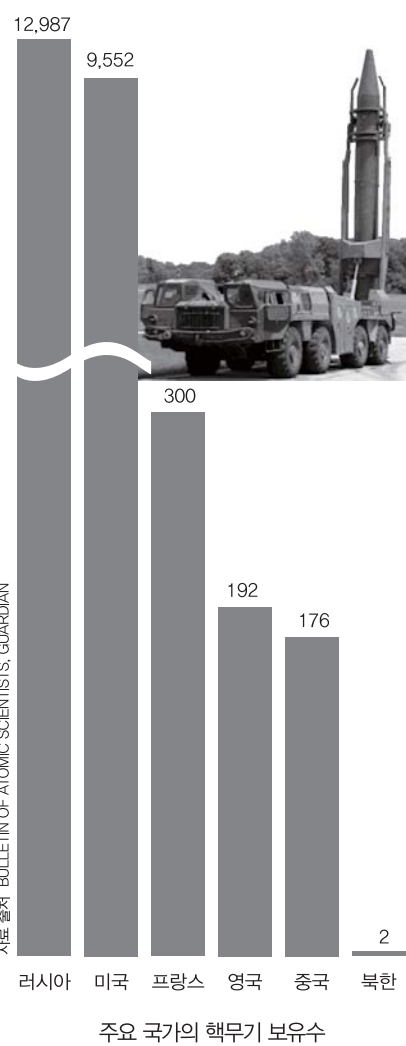
핵안보정상회의의 대응을 위해 여러 차례 열린 회의에서 일부 NGO 활동가들은 이 회의의 공식 의제가 주로 핵발전 문제이므로 진보진영의 대응도 주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회를 이용해 핵발전소 반대(‘탈핵’)를 선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핵발전 문제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부문주의도 작용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것은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행동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과 연결돼 있다.

그러나 핵발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대화하는 이명박과 오바마 ‘핵안보’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국주의적 압박을 정당화하려고 지어낸 말이다.



도 단지 선전이 아니라 핵발전을 부추기는 강대국들의 모임과 논의를 막아야 한다. 또한 핵발전과 핵무기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핵무기·핵발전을 통해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가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패권 추구에 대한 분명한 반대가 중요하다.

핵무기 문제에서도 누구의 핵이 진정한 문제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진보진영 내에서도 미국 제국주의와 북핵 문제에 대한 관점은 단체마다 상당히 다르다.

뜨거운

예컨대 일부 진보 단체들은 북한의 핵보유와 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양비론적 태도를 취해 왔다. 반면 일부 진보진영은 북한의 핵보유를 불가피한 ‘자위적’ 수단으로 옹호한다.

그러나 우선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양비론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야말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친미국가들의 핵 무장을 용인해 온 주범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낳은 ‘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국이 북

한에 대한 ‘핵선제공격론’까지 들먹이자, 북한은 핵 무장을 통해 안전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핵무기에 우선해서 반대해야 하고, 이란·북한에 대한 강대국들의 위선적·패권적 압박에 동조해선 안 된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진정한 반제국주의 투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핵무기는 미국의 전쟁광들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민중의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진영은 미국의 위선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압박에 단호하고 일관되게 맞서 싸우면서 모든 핵에 반대하는 견지에 서야 한다.

그러려면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하고 이에 맞서는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일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핵안보정상회의의 ‘반대’ 슬로건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아쉽다. 지난 12월 16일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의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벌어졌다.

‘반대’보다는 ‘탈핵’이라는 대안 전략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가진 활동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도 아니다. 반핵이나 탈핵 같은 구호가 실현 가능하지 않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거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며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같은 부분적 요구만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처럼 정부와의 대립을 회피하는 수세적인 태도가 핵안보정상회의의 ‘반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나타나는 듯하다.

‘핵안보정상회의의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것은 민주통합당까지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핵에 대한 원칙적 반대가 아니라 ‘원전재검토’ 등을 내거는 것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핵발전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할 문제가 아니다. 핵발전을 폐쇄할 때 진정한 안전이 가능하다. 일본 핵재앙이 그것을 보여 줬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핵안보정상회의를 분명히 ‘반대’하며 핵무기·핵발전을 퍼뜨려 온 핵 강대국들의 계획을 막아야 한다.

장호중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하라

12월 22일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여덟 기를 추가로 짓겠다며 영덕과 삼척을 그 부지로 선정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몰린 틈을 이용해 도둑처럼 몰래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핵발전소 부지 선정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반발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감춰 오던 사실들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핵발전이 근본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 피해가 끔찍할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정부의 억지와 달리 국내 핵발전소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 첫 가동을 시작한 1978년 이래로 6백51건의 사고와 고장이 있었고 최근에도 울진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3호기가 고장 나 가동이 중단됐다. 엄청나게 복잡한 설비 때문에 언제



2011년 4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행동’ 한국의 반핵운동은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승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든 의외의 장소에서 고장이 생길 수 있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얼마 전 대량 정전 사

태를 핑계로 위기감을 높여 핵발전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이는 사기극에 가깝다. 지금 핵발전소 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가동까지 약 10년이

걸리고 한 기당 수조 원이 드는데 그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면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다.

핑계

게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등 유럽에서는 반핵 운동의 성과로 몇몇 나라들이 핵발전 포기를 선언했고 그 결과 핵발전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크게 잃었다.

엄청난 양의 전기를 낭비하는 공장들과 빌딩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핵발전소를 아무리 지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가정용 전력보다 훨씬 저렴한 산업용 전기 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단열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전기 난방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 발표 이튿날부터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 대책위 등이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에 반대하는 1천인 선언 등을 발표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1989년부터 여러차례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정됐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이를 취소시킨 삼척과 영덕 대책위는 주민소환 운동 등을 선언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깨닫추기식 여론 조사와 각종 지원 약속 때문에 지지 여론이 압도적이던 지역 분위기도 반전됐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이런 상황에 아무 대책없이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 정부를 비판할 정도다.

이런 분위기에서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 같은 대중운동을 건설한다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막을 수 있다. ‘핵 없는 세상’은 이런 투쟁의 전진과 발전을 통해서만 현실이 될 수 있다.

장호중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비극의 뿌리는 미친 교육 체제에 있다

12월 19일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했다. 유서에는 그 학생이 친구들과한테서 당한 수많은 학대와 그로 말미암은 마음의 고통이 절절히 드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자 했던 학생이 '매일 남몰래 울고, 제가 한 짓도 아닌데 억울하게 꾸중을 듣고, 매일 맞던 시절을 끝내는 대신 가족들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라는 말을 남기고 몸을 던진 비극이 일어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 글을 쓰면서 유족들에게 부족하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비극적인 일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학생을 괴롭힌 학생들과 그것을 미리 알아채고 조치하지 못한 담임 선생님, 나아가 교장 선생님에게 분노하고 있다. 물론 나는 자살한 학생을 직접 괴롭힌 학생들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심분 공감한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학교 현장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교사로서,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생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학생 개인을 둘러싼 수많은 상황에서 비롯한다. 어른들이 직장 동료와 싸우는 것 역시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은 스트레스와 관계 있듯이 말이다.

자살한 학생은 친구들에게 비인간적인 괴롭힘을 받았지만, 이는 괴롭힌 학생 개인의 문제, 담임 교사의 문제,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된 교장의 문제로만 협소하게 볼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괴롭히도록 만든 미친 교육 체제 자체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더욱 심해지는 경쟁과, 경쟁에서 낙오한 학생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 교육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계속된 패배 끝에



살인적인 경쟁교육은 학생들의 인간성을 짓밟고, 학교를 차별, 따돌림,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든다.

'나는 무얼 해도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을 내면화한다. 그리고 그런 절망감과 무기력을 자신들끼리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푼다.

경쟁과 서열

나는 얼마 전에 우리 반 한 학생에게서, 학생들이 얼마나 경쟁과 서열을 중시하는지를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중학교 때 각 반에서 '매치를 떠서' 싸움 순위를 정하고, 많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상위 서열을 정한다. 한 번 정해진 서열은 거의 바뀌지도 않고 서열이 낮은 학생들은 서열이 높은 학생들이 시키는 일을 '감히'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비극적이게도 학생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이 경쟁교육 체제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들 역시 폭력적인 방식으로 경쟁과 서열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런 서열을 지키는 것, 이를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 그리고 서열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을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학생들의 자존심이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행동에서 자존감을 얻을 기회가 얼마나 없었길래 이런 비정상적인 순위 다툼을 벌이는 것일까? 나는 이 미친 교육 체제와 이를 만들어 내고 공고화하려는 정부에 분노를 느낀다.

이처럼 학교 폭력의 책임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교육 체제에 학교 폭력의 뿌리가 있다. 그럼에도 기성 언론은 연일 대구 중학생 비극의 가해자들이 한 자국적인 행위를 보도하며 개인의 문제로 분위기를 몰고 있다.

마치 4년 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2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조선일보>가 '개인의

책임을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라고 논설을 썼던 것과 꼭 닮았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교육 제도와 사회 체제가 수많은 평범한 개인들에게 절망을 주는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반대로 정상적인 교육 제도와 사회 체제 속에서 비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개인이 문제라는 착각을 하게 한다.

그러나 1퍼센트만을 골라내겠다며 학생들에게 미쳐 버릴 듯한 경쟁 압력을 가하는 교육이 정상인가? 그 속에서 학생들의 마음이 뒤틀리고, 병들어 온갖 폭력이 벌어지는 학교가 정상인가?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생들을 만든 비정상적인 교육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지금도 일부 사례에서 우리는 더 나은 학교를 만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경기도에 있는 혁신학교인 장곡중학교는

교문 지도를 폐지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억압적 통제를 없애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학생 폭력이나 교사·학생 간 갈등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이렇게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경쟁적 시험으로 학생들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는 즐거운 배움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때 지금과는 다른 학교가 가능할 것이다. 또 교사 수를 대폭 늘려 교사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임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즉각 도입돼야 한다.

더 나아가 독초를 제거하려면 독초의 뿌리를 파야 하듯, 미친 경쟁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교육의 근원인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

박태현 전교조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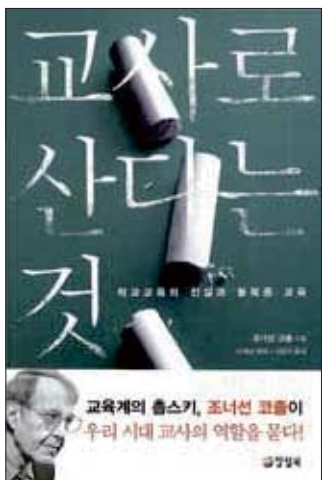
‘닥치고 경쟁’ 교육에 맞서기 위한 지침서

최근 '대표적인 친미주의자이자 친일파로 반정부 시위를 혹독하게 탄압한 대통령'을 묻는 문제를 출제한 역사 교사가 화제다. 동료 교사들은 나에게 그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고, 교과서에 없는 지문을 시험에 내서 문제라고 말했다. 교사는 교과서의 지식을 그대로 전달할 뿐 '나'의 정치적 견해를 아이들에게 알리려 안 된다는 불문율이 교사들 사이에 퍼져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자 우리들은 학생 본분에 맞지 않는 권리를 줬다며 미친 듯이 저주를 퍼부었다.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두발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고 학교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주면 교육이 망가진다고 한다. 이들은 학생들이 '닥치고 공부'만 하는 기계일 뿐,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의 독립적 주체로 성장하는 것은 마음 속 깊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적인 권과 정치적 권리가 '거세'된 한국에서 교사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조너선 코졸이 지은 <교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진보적 교사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던 나 자신도 마음이 뜨끔뜨끔 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교육의 실제 내용)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



《교사로 산다는 것 : 학교교육의 진실과 불복종 교육》
조너선 코졸 지음 | 양철북 | 180쪽 | 9천 원

영하고 있다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했을 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를 비판하고 논박하는 것에는 힘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함께 실천하는 문제에서는 용기가 없어 종종 뒤꿈치만 댔다. 나조차 학생들을 교사에게 순응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혼계하지 않았다.

저자는 학교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지적한다. 학교는 12년 동안 "앞 세대의 무미건조한 가치관과 심한 편견을 주입"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 "맹목적 애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이기심"을 가진 체제 "순응"적인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아무리 공교육의 목표를 아름다운 수사로 치장해도 공교육의 창시자들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학교는 "부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적은 경비로 목적을 달성하는 곳"이다.

공교육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교사는 '나'의 정치적 신념을 말해선 안 된다. 중도는 진실하고 양극단은 불온하다는 편견과 정치적으로 조작된 개념이 교과서에는 가득하다. 교사도 논쟁적인 학생을 만류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로 계급 분단선이 아니라 국익을 강조한다.

교과서는 혁명적 역사도 급진적인 활동가들도 무미건조하게 조작한다. 불복종 운동으로 저명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경우 수많은 저작 중에 미국 교과서에 실린 글은 교차 숲과 시냇물에 대한 감상이었다. 교과서 지도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결론을 내려 줘야 하는지까지 나와

있다. 이는 한국의 교육과정도 내용뿐만 아니라 결론까지 지정해 주는 것과 동일하다. 교과서는 신념도 비전도 없는 무미건조하고 뻔한 스토리로, 교실은 논쟁과 토론이 없는 지루한 수업으로 가득 찬다.

진정 교사로 산다는 것은

저자인 조너선 코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가장 빈곤한 흑인 거주지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흑인 해방 운동을 노래한 시로 수업했다는 이유로 해직됐고, 그 이후에 미국의 불평등 교육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실천을 해 왔다. 저자는 미국 교육의 어두운 현실을 공분화해 사회 변혁에 필요한 운동을 촉진하려고 책을 썼다고 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교사들에게 제안한다. 교실을 '교과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자유로운 생각의 장'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배자들의 관점부터 급진적인 관점까지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치열하게 논쟁함으로써 학생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판단을 유보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현실에

분노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불복종 교육을 실천하라고 제안한다. 지배자들의 언어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가진 교과서를 학생들과 함께 만들고, 거대한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 실천의 삶으로 인도하자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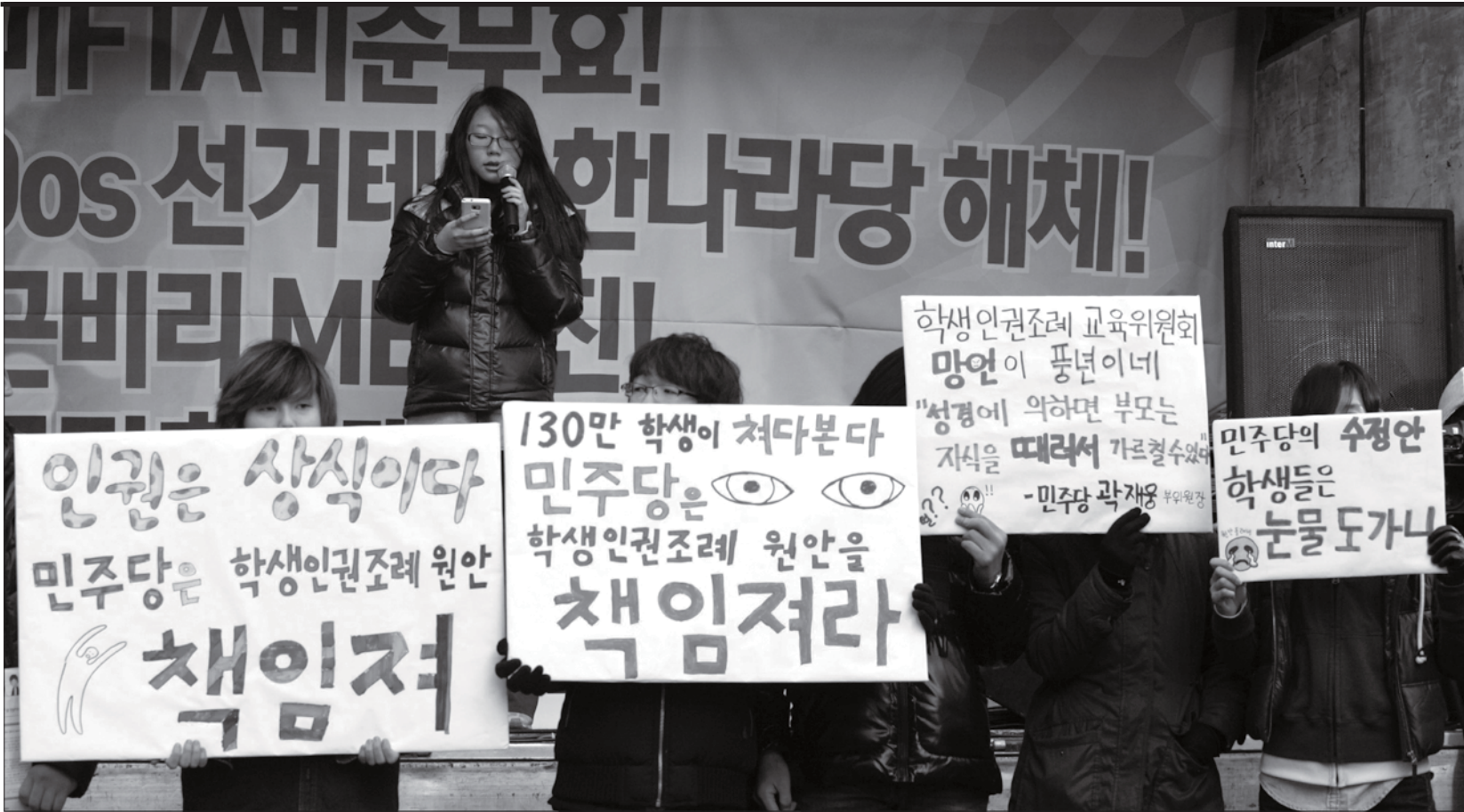
"학생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수업은 공책에 필기한 내용도 아니고, 교과서에 인쇄된 공책한 문장도 아니다. 그것은 수업하는 내내 교사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메시지다. 그것이야말로 평생 잊히지 않는 교훈이 될 것이다" 하고 저자는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교사들은 문제 교사로 낙인 찍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도 세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훌륭한 '수업'은 교사 자신이 지금 현실에 맞서 싸우는 실천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기심과 복종만 배운 채 경쟁의 낙오자로 학생을 길러내는 현실에 분노하는 교사에게, 이 책을 함께 읽고 학교를 진정으로 혁신하기 위해 토론하고 실천하자고 제안해 본다.

김연오 전교조 조합원

서평





12월 17일 한미FTA 비준무효 촛불집회에 참가한 성소수자와 인권활동가 들 성소수자와 인권활동가 들의 단호한 점거 농성과 광범한 연대가 값진 승리를 일궜다.

차별없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점거농성 평가

차별에 맞선 저항이 거둔 통쾌한 승리

정율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12월 19일, 마지막 순간까지 파를 말리게 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찬반 격론 끝에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학교에서 동성애가 허용되면 에이즈가 창궐한다’ 따위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 혐오 캠페인을 벌였던 우파들을 통쾌하게 물리친 것이다.

사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가운데 ‘성적 지향’, ‘임신과 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사유가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일이었다. 광복후 교육감 재임 시절,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안을 준비할 때부터 성적 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분노한 성소수자들은 두 번에 걸쳐 항의모임을 개최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했다. 다양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상희 자문위원장을 직접 만나 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자문위원회 안에 성적 지향 등의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될 수 있었다. 하지만 광복후 교육감의 부재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지는 못했다. 아마 주민발의안이 없었다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목소리는 한참 후에나 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도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하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 앞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김명신, 서윤기 등 우호적인 교육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12월 16일로 서울시 교육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도 성소수자들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후퇴할 수 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12월 14일, 공동행동 소속 성소수자 30여 명과 인권활동가들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로비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던 성소수자들이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며 권리를 외치기 시작한 최초의 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돈도, 먹을 것도 없고, 농성에 필요한 장비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절박한 상황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새벽까지 회의하고

쭉잠을 자면서 농성을 유지했다.

점거를 통해 거점을 형성한 행동은 매우 중요했다. 점거농성장은 연대의 중요한 구심점이었다. 농성장은 소식만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늘 넘쳐나 자리가 비좁을 정도였다.

농성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민발의안 성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했던 청소년 인권활동가들도 성소수자들과 함께 농성장을 지켰다. 다행, 다양한 먹을거리로 가득 찼던 농성장은 축제 현장과도 같았다.

보수단체들은 연대가 확산되자 당황했는지 농성장에 들어와 성경책을 펴고 행패를 부리긴 했지만 쉽게 농성자들을 밖으로 내치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 성소수자들은 여러 진보운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해 왔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연대했던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으로 인사하고 연대를 요청했다.

이런 활동의 결과, ‘퀴어버스’를 기억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는 추운 날씨에 농성장을 찾아와 컸고, 김진숙 지도위원은 전화로 힘을 보태줬다. 쌍용자동차, 기흥, 재능 노조 역시 우리와 함께 했다.

포이동에서는 만두가 도착했고, 학교 통폐합에 맞서 싸우는 동국대 학생들도 음료를 들고 찾아왔다. 인권활동가들은 매일 농성장으로 출근하다시피 했고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은 물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방문, 연대성명도 계속됐다.

무엇보다 매일 진행된 촛불문화제에 1백 명이 넘는 성소수자들이 함께했다는 것이 점거농성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 줬다.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

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 성소수자위원회가 농성에 결합해 있었음에도, 성소수자위원회가 직접 작성해 준 논평조차 즉각 발표하지 않아 공개사과 요구를 받아야 했다. 나중에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간부가 농성장을 지지방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성소수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점거농성장의 추위가 아니라, 차별금지 사유가 타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의 차별금지 사유가 열거 대상에서 빠지고 포괄적으로 몽둥그려질 수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낼 것을 강요받는 잔인한 상황이 계속 연출됐다.

‘여러 달 동안 주민발의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청소년 등을 생각하면 부족한 주민발의안이더라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원칙과 타협 사이

하지만 성소수자들은 타협하지하기로 했다. 우파의 압력 때문에 구체적 차별 사유를 빼고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식으로 몽둥그린다면 결국 그 ‘모든’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은 빠지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존재가 인정돼야 권리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노선이었다.

이런 팽팽한 대립 속에 인권조례 관련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결정은 원래 예정된 16일에서 19일 오전 9시로 연기됐다.

주어진 시간은 이를. 성소수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그 어떤 당론도 정하지 않고 있던 민주

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국 12월 19일,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성적 지향’, ‘임신 출산’은 물론, 법률에서는 최초로 ‘성별 정체성’이라는 차별금지 사유까지 적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확정했다.

이 승리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농성을 이어갔던 성소수자들의 힘이 가장 주요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중 찬성표를 들었던 의원들은 농성장을 찾아 ‘원칙을 지켜 줘 고맙다’, ‘농성장 계신 분들의 힘이 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은 안건 마지막인 51번째로 올라왔다. 본회의에서 우파 의원들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찬반 격론 끝에 찬성 54, 반대 28, 기권4로 최종 통과돼 완승으로 끝났다. 농성장은 환호와 눈물로 넘쳐났다.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교과부가 제동을 걸고, 교육청도 재심의 요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승리가 학생들을 훈육하고 기득권의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학교 교육에 일침을 가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번 농성 투쟁은 성소수자들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확인시켜 줬다. 소수자 청소년들의 존재가 언론에 많이 알려졌고, 입법기관에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 것 자체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투쟁은 성소수자 운동에 자신감을 북돋아 줬고, 단결의 의미를 일깨워 줬다. 또, 지지와 연대의 힘을 확인시켜 줬다.

농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지와 연대와 감사의 의미로 또 다른 연대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12월 23~24일에 진행된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에 참여해 양말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연대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차별에 맞선 성소수자들은 이제 겨우 숨통이 트였을 뿐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위기를 맞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제정되고 학교에 그 정책이 안착되는 순간까지 성소수자들의 정당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지지와 연대 바란다.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⑥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은 투쟁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조직을 만들어 자본가들의 국가 기구를 대체할 수 있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이렇게 노동계급이 스스로 운영하는 사회다.

그러나 북한이나 옛 소련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민주주의는커녕 선거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조차 억압했다. 수십 년간 수천만 명이 강제수용소에 끌려갔다.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창시자인 토니 클리프는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통해 옛 소련이나 북한 같은 사회의 성격과 동력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옛 소련이나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회주의는 곧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유화가 곧 사회주의라면 생산을 대부분 국가가 통제하 나치 시대 독일이나 박정희 시대 남한도 사회주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토니 클리프는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를 넘어서, 근원에 있는 실제 생산 관계와 체제의 근본 동학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체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소유한 단위는 개인, 소기업, 대기업, 국가 등으로 변해 왔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구체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본을 소유하는 단위가 바뀌어 왔지만 그렇다고 체제의 근본 동학이 바뀐 것은 아니다.

착취와 경쟁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해 잉여가치를 만들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자본가들끼리도 끊임없이 경쟁해야 한다. 이렇게 착취와 경쟁을 통한 축적이 자본주의의 근본 동학이다.

물론 옛 소련 체제를 세계 체제와 떼어놓고 보면 그 속에 경쟁하는 자본가도 없고, 시장도 없어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봤을 때 옛 소련은 서방과 군사적·경제적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가 구현된 사회였다.

실제로 옛 소련 사회에서는 서방과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더 빨리, 더 빨리” 생산해야 한다는 논리가 사회 전체를 압도했다.

이 때문에 옛 소련 사회의 생산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이뤄지지 않았다. 핵무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쏘는 북한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이는 현실을 봐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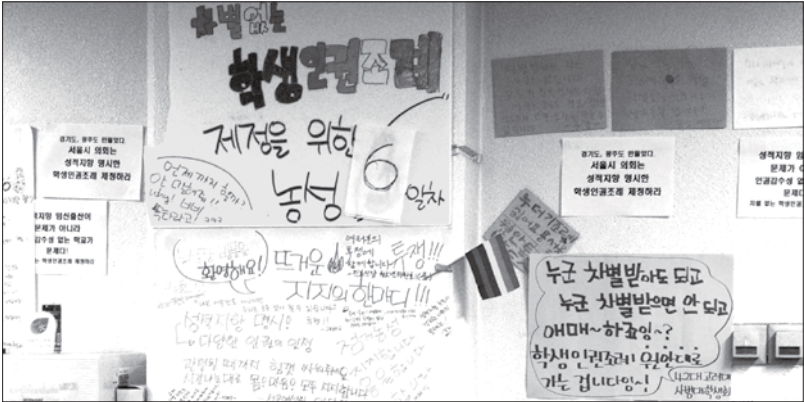
이렇게 북한과 옛 소련 같은 사회를 국가자본주의로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실천적 함의가 있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전통을 지킬 수 있게 했다. 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 군대나 지도자가 위로부터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 자기해방을 위해 투쟁해 민주적으로 사회를 통제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원칙을 일깨웠다. 옛 소련이 몰락한 후 그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했던 많은 활동가들이 큰 혼란을 겪었지만, 국가자본주의론은 그 혼란을 벗어날 수 있는 나침반 구실을 했다.

또 국가자본주의론에 근거해 북한 사회를 보면 더 올바른 분석과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북한 사회 내에서도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이 형성됐다. 이들은 스스로 투쟁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을 사회주의라 생각해 지지하거나, 그 반대로 서방 자본주의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양자택일을 벗어나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대안을 추구할 수 있다.

정선영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시의회 점거 농성장

전교조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

2009년 민주주의를 위한 교사 시국 선언을 탄압하며 시작한 MB 정부의 교사 대량 징계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10년 1월 시국선언이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민주노동당 서버를 불법적으로 해킹해 증거를 수집하고, 교사들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탄압했다. 기소된 교사 전원이 2010년 11월 벌금형 정도의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는 올해 6월 또다시 교사 1천4백여 명을 포함해 공무원 1천6백4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똑같이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고 박근혜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처럼, MB 정부는 교사·공무원에 대한 법 적용을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공공연하게 거액을 준 교사들은 처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을 한 것은 문제 삼는다. 정부는 이런 부당한 탄압을 당장 멈춰야 한다.

이중 잣대

교사·공무원은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교육청의 징계도 감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루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기소 자체를 빌미로 파



내년 선거 국면에서 정치 기본권 보장 요구를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투쟁을 확대해 정치적 압력을 키워야 한다.

면·해임 등 중징계를 했거나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24일 충북에서는 징계 위원회를 개최한 교육청에 맞서 3백여 명이 집회를 열고 훌륭하게 싸웠고, 이런 영향으로 충북 교육청은 아직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12월 8일 인천에서는 해임 등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내는 것은 헌법도 보장한 기본적 권리다.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한국에서도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서명 운동, 11월 13일 교사 대회, 12월 8일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징계에 맞서 투쟁을 건설하기보다 법 개정에만 치중하며 정치권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은 아쉽다.

다가오는 공판 기일에 맞춰 MB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법정 투쟁을 벌이는 등 더 힘차게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김성보 전교조 대의원

쌍용차 희망텐트촌

폭넓은 연대 건설이 중요하다

12월 23일 쌍용차 공장 앞에서 열린 ‘1차 희망텐트촌 포위의 날, 외락 크리스마스’에는 살을 에는 추위와 굶은 눈발 속에서도 7백여 명이 모였다.

19명의 연이은 죽음을 지켜보며 고통을 겪어 온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이후 공장 앞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연대 집회”(양형근 쌍용차지부 조직실장)라며 기뻐했다.

희망텐트촌의 일일 존장을 맡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희망버스에서 보여 줬던 그 힘이 쌍용차에서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쌍용차 투쟁이 성과를 내려면 광범한 연대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 점에서, 이날 집회에서 일부 활동가들이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심지어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에게까지 야유를 보내고 “필요 없다”고 소리친 것은 부적절했다. 물론 예전 민주당 정부 하에서 벌어진



12월 23일 희망텐트촌 ‘1차 포위의 날’ 집회에서 웃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

노동자 탄압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달려 온 정치인에게 야유를 보낼 필요는 없었다.

정치인들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투쟁에 사람들의 지지가 폭넓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투쟁의 전진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할 필요도 있다. 민주당에 대한 경계와 비판을 거두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다. 게다가 정동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주당의 여타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평판을 만들어 왔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정치인

더 나아가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투쟁 등에서 민주당과는 명백히 다른 구실을 한 진보정당이다. 금속노조 지도부도 통합진보당을 찾아가 ‘함께 쌍용차 투쟁을 만들어 보자’고 호소한 상황에서, 통합진보당과 함께 협력적으로 투쟁하면서 적절한 비판을 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지금, 쌍용차 사측은 ‘와락! 크리스마스’가 끝나자마자 농성장을 전부 철거하며, 연대 확산을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제대로 맞서려면 개방적인 태도로 폭넓은 사람들을 이 투쟁에 동참시켜야 한다.

소은화·박설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사진 출처 한국비정규교수노조(부산대학교 본회)

임금 인상을 쟁취하다

비정규 교수(시간강사)는 대학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다. 비정규 교수의 임금은 보통 전임 교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현실에 맞서 비정규 교수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해 투쟁했다. 그 성과로 정부는 올해 초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을 도입했다. 이 개선책의 내용은 2011년 시간당 강의료를 6만 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대 당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학교 당국은 개선책 발표 이전에 체결한 시간당 강의료 5만5천 원을 고집하며 개선안 도입을 거부했다.

투쟁

이에 맞서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 분회는 교섭과 함께 투쟁을 벌였다.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도 결의하고, 본관 앞 천막 농성도 시작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시험 성적 입력을 거부하는 쟁의를 결정했다. 만약 노조가 쟁의에 돌입한다면 성적 확인이 시급한 학생과 비정규 교수와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부산대 다함께 회원들은 신속하게 천막 농성장에 지지 대자보를 부착하고 투쟁을 응원했다. 농성 중인 비정규 교수들은 매우 기뻐했다. 총학생회도 농성 물품들을 지원했다.

본부 앞에 농성장이 차려진 다음날 열린 마지막 교섭에서 학교당국은 14.5퍼센트 인상된 협상안을 제시했고, 인상된 강의료를 2011년 1~2학기 강의에도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의 투쟁과 학생들의 신속한 연대가 이런 양보를 끌어낸 힘이다.

이상엽 대학생다함께 부산 모임

쌍용차 파업 집회 참가 벌금형 2차 재판

“재판부는 나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12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김무석 동지의 재판이 있었다. 그는 2009년 쌍용차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뒤 벌금형을 받았지만 1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해 2차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김무석 동지의 모두 진술을 가로막고 심지어 “정치 논리를 선전”한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끌어내리기까지 했다.

우익 판사의 횡포가 알려지자 김무석 동지를 지원하겠다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가 무료 변호에 나섰다.

검사 측은 목격자라며 한 의경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지만, 그는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사 측은 ‘죄를 입증할 어떤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한겨레〉 기자는 김무석 동지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쌍용차 사측과 경

찰의 야만적인 진압 과정을 증언했다. 연행 당일 아침 쌍용차 사측은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무장한 구사대를 동원해 공장 앞 농성장을 공격했다. 경찰은 이런 구사대의 난동을 제지하기는커녕 피신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뒤쫓아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김무석 동지는 당당하게 최후 진술을 했다. 이번엔 우익 판사도 꺾소리 못했다.

“이 나라의 법 질서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파수꾼이 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은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이 구사대에게 폭행당할 정도로 폭력 사태가 심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검사의 공소사실에도 경찰과 사측의 합동작전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위로 나서게 됐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제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다음 선고 공판은 1월 1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0호에서 열린다. 법정 투쟁의 선봉보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도 김무석 동지의 법정 투쟁에 끝까지 응원을 보내자.

김진석

분명한 원칙과 행동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막아내다

학생들이 없는 방학에는 대개 모든 교사가 이를 당번제로 근무하고, 근무 조가 아닌 낯은 집 또는 본인이 택한 장소에서 교재개발과 개인연수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번 방학에 “기간제 교사 3명은 5일을 근무한다”라는 업무 지시가 내려왔다.

청소 때문에 방학 중 등교한 학생들을 위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만 더 많은 근무를 요구하는 지침은 명백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다.

교감은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데 일을 시키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지적 받는다. (기간제 교사는) 담임이 없고, 평상시 업무가 적으니 방학 중 근무를 더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중 두 명은 학기 중 담임을 맡았거나 현재 맡고 있고, 출산휴가 중인 정규직 교사가 맡았던 업무를 그대로 인수인계 받았다. 다른 한 명은 교육청이 파견한 한시적 기간제 교원인데 순회근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담임을 맡지 않는다. 게다가 담임도 아니고, 업무 강도도 비슷한 정규직 교사에게는 추가 근무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 어떤 정규직 교사도 평상시 업무가 적다는 이유로 방학 중 추가 근무를 요구받지 않는다.

우리 학교 전교조 분회는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방학 중 추가근무를 시킬 만한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음을 확인했고, 지회와 지부에 연락해 문제를



비정규직 교사를 늘리고 차별하는 교육 현실을 바꿔야 한다.

공유했다. 그리고 교직원회와 교장 면담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교장은 개별면담에서 기간제 교사의 추가 근무가 강제나 의무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인 부탁인데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고 한 발 물러섰고, ‘부탁을 흔쾌히 들어준’ 기간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전체 메시지를 보내 왔다.

나는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다행이지만 기간제 교사에게만 추가근무를 부탁한 점은 차별이라는 메시지를 전체 교직원에게 보냈다.

결국 교장은 “방학 중 기간제 선생님들에게만 부탁드린, 2일 근무조 외에

지원 협조사항은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완전히 물러섰다.

나는 이번 승리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전교조 지부 게시판에 올렸다. 댓글과 응원이 쇄도했고, 출력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나눠 봤다는 조합원도 있었다. 이번 승리는,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하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내가 속한 전교조 분회, 지회, 지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주저하지 않고 행동한 덕분에 이뤄질 수 있었다. 분명한 원칙과 행동은 나 자신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고루했고 이후에 있을 다른 투쟁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수진 전교조 교사

진보언론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를 내보내서야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이 이미 1990년에 제정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이동의 자유도 빼앗긴 채 특하면 비자가 박탈당한다. 단속·추방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사망 사고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을 자임하는 <민중의소리>는 세계이주민의 날을 하루 앞둔 17 일,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기사를 실었다.

‘중국동포 밀집지역 대립종 파출소가 보너스’라는 제하의 기사는 “항상 흥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중국동포들이 많아 현장에 나가서는 언제 어디서 흥기가 날라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긴장해야 한다”는 등 대립파출소 경찰들의 주장만을 인용해 실어, 마치 중국동포 이주자들이 조직폭력배나 되는 양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와 우파언론은 중국동포 이주자들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을 이용해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자들을 이간질시켜 단결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정당화하고, 한국 정부가 ‘퍼센트’만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때문에 생긴 각종 사회 문제들을 이주자 탓으로 돌리려 한다.

우파 언론들은 심심찮게 외국인 노동자를 범죄의 온상처럼 묘사한다. 이러한 우파들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모를 리 없는 <민중의소리>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는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에 참가한 이주자들

기사를 게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심지어 <민중의소리>는 “차량에 테이저건이 있고 가스총은 항상 차고 다니지만 수갑 하나 채우는 데도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며 이주노동자 단속 장비 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경찰의 인터뷰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실었다.

그간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며 그물총, 테이저건, 가스총 등을 이용한 ‘인간사냥’을 해 온 경찰을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민중의소리>가 세계이주민의 날에 열린 이주자 권리 보장 집회는 전혀 보도하지 않으면서 이주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진보언론답지 못했다. <민중의소리>는 지금이라도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최창환

혁명적 신문과 혁명적 자각

나는 지난 한 달간 국민대에서 선관위가 부당하게 진보선분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항의해 총학생회 선거 보이콧 운동을 건설했다. 경험도 많지 않고, 모든 측면에서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었다.

힘든 투쟁이 계속되고 사기가 점점 떨어졌다. 나중에는 선관위의 작은 도발에도 풀이 죽는 경우가 많았다. 회피하고만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레프트21>에 실린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성명서’를 읽게 됐다. 군부가 민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타흐리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잔인하게 탄압한 것에 대해 혁명가들이 낸 성명서였다.

성명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전과는 매

우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투쟁을 건설해 나가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용감한 것인지 깨닫게 됐다. 그것은 국민대에서 건설했던 투쟁의 경험이 내 몸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집트의 동지들이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는지가 글에서 절절하게 느껴졌다.

마지막 구절에 ‘혁명 열사 만세! 혁명 만세! 민중에게 권력을!’이란 부분을 읽었을 때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 구호가 얼마나 많은 용기와 헌신과 자기 극복을 담보로 하는 말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야만 외칠 수 있는 구호였다.

‘이집트의 동지들은 군부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고작 선관위 때문에 사기가 꺾인다는 게 말이나 되나? 나 또한 혁명가다. 이집트의 동지들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안에 용기가 생겨났다.

그때 나는 신문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됐다. 신문은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도 쓰이지만, 가장 먼저 나 스스로를 조직하는 데 쓰인다. 신문을 읽음으로써 세계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을 조망하게 되고, 나의 계급의식과 국제주의적 시각, 그리고 혁명적 인식을 계속해서 연마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나는 계속해서 혁명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결국 신문은 나의 인생을 혁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권혁민

구속노동자의 편지

감옥에서 흥미롭게 읽은 <레프트21>

다른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 다함께 동지들께 투쟁의 인사를 전합니다. 투쟁!

저는 유성기업 투쟁을 하다가 구속된 구철화라고 합니다.

이 추위에도 거리에서 투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텐데,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소식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레프트21> 71호는 잘 받아 봤습니다. 이번 호에 실린 다양한 글 중 ‘한나라당 해체 위기’, ‘레프트

21> 판매자 2심 최후 진술’ 기사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기사 제목으로 ‘난파하면서 위폐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한나라당’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며 같은 방에 수용된 사람들이 많은 관심과 공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레프트21> 재판 투쟁의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노동자·민중의 힘찬 투쟁 소식을 더욱 많이 전해 주십시오.

2011. 12. 21

천안구치소에서 구철화 드림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토론회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다함께 서울 서부 공개토론회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연사 : 김하영 <《국제주의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저자,<다함께 운영위원 (마르크스21) 공동편집자>

일시 : 1월 1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 02-324-3400

다함께 경기 남부 공개토론회

김정일 사망 이후 - 북한은 어디로?

연사 : 섭외중

일시 : 1월 19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추후 공지

다함께 서울 남부 공개토론회

중국 경제의 앞날과 중국의 저항 운동

연사 : 이정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 1월 1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모임공간 모토 5실 (강남역 12번 출구 300미터 강남제일빌딩 8층)

참가비 : 4천 원

문의 : 02-416-0963

다함께 서울 서부 토론회

북한 사회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 - 국가자본주의론

연사 : 차승일 <《마르크스21》편집위원>

일시 : 1월 5일 (목) 오후 8시 10분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 02-324-3400

다함께 서울 동부 토론회

북한 사회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 - 국가자본주의론

연사 : 김문성 <《레프트21》기자>

일시 : 1월 5일 (목) 오후 8시 10분

장소 : 웹사이트 추후 공지

참가비 :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 070-8877-5533

다함께 서울 중북부 토론회

북한 사회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 - 국가자본주의론

연사 : 김영익 <다함께 활동가>

일시 : 1월 5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한성대에듀센터 807호 (해학역 4번 출구 CGV 옆 건물)

문의 : 02-6338-2395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99-13 3층 303호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2-6338-2395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89-2 201호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 논란

조문과 조의 표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최미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이희호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한 가운데, 조문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대표단은 정부가 민간 차원의 조문단 구성과 방북을 허가하라고 요구했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방북을 신청했다. 민주총과 한국노총도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자 방북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황혜로 대표는 조문을 위해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미 방북을 감행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 김영삼 정부는 조문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다며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는 급속히 경색됐고, 좌파 마녀사냥이 벌어졌다.

이번에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그때와는 다르다. 정부는 북한 주민에 ‘위로’를 표하고, 선별적으로 조문을 허용했다. 이것은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남한 지배자들이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꼭 달가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지나친 강경대응을 자제해 민주통합당 등의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을 달래며 위기를 모면하고픈 계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우익의 눈치도 봐야 하기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 표명 방식을 택해서 ‘조문을 한 것도, 안한 것도 아니다’는 말이 나온다. 조문 허용조차 철저히 ‘상호주의’에 입각해 있다. 북한의 조문을 받았던 이희호와 현정은에게만 조문이 허용됐고, 노무현의 유족인 권양숙 씨나 진보진영의 조문은 불허되고 있다.

보수 분석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조문단을 구성하자고 박근혜에게 제안했지만 박근혜는 “정부 기본 방침과 다르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그동안 중도층을 잡는다면 이명박의 적대적 대북정책과 거리를 두는 척하더니 결국 보수 분석을 드러낸 것이다.

남한 정부는 분향소를 차리는 것조차 처벌하려 한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이라는 단체가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리려 했지만 경찰이 불허했고, 보수단체들이 난입해 난장판이 됐다. 서울대에서는 한 학생이 학교에 분향소를 차리자 학교 측이 10분 만에 청원 경찰까지 동원해 철거했다.



〈연경각〉 조문길

조문단 방북 허가를 촉구하는 6·15남측본부 북한 정권에 대한 견해 차이를 떠나 조문을 빌미로 탄압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정부는 황혜로 씨를 국가보안법 상 잡입탈출죄로 처벌하려 하고, ‘김일성 사망 때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다’며 분향소 설치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분향소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추도하도록 유인하는 것도 찬양·고무”라는 것이다.

북한은 조문 불허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야만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 북한으로서도 심각한 레임덕에 몰린 임기 말 정권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우파적 분석과 좌파 마녀사냥의 기회를 이용할 필요 때문에 조문에 대한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을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좌파는 남한 정부가 조문과 조의 표명을 가로막고, 그것을 빌미로 탄압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우파들은 ‘어떻게 북한 민중의 배를 굶기는 독재자를 애도할 수 있냐’고 주장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에 여러 조건을 달아 반대해 왔고 지금까지도 틈만 나면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자들이 이런 비난을 할 자격은 없다.

또, 북한 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토론하고 논쟁할 문제이지, 탄압할 문제가 아니다. 이

것은 사상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다. 남한 정부는 남한을 북한보다 우월한 체제로 여기는 사상의 자유만을 보장하려 한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국가가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북한과 그 체제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다.

이중 잣대

사실 분향소 설치와 인터넷 상의 조의 표명마저 ‘이적 행위’라며 엄청난 범죄처럼 취급하고,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고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꼴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조의 표명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전혀 아닌데 말이다.

게다가 누구는 조문해도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특히 그동안 남한의 지배자들과 기업가들은 북한을 방문해 북한 관료들을 만나 왔지만 처벌받지 않은 반면, 진보진영의 방북은 처벌받아 왔다. 박근혜도 2002년에 방북해 김정일을 만난 바 있지만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탄압에 반대한다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진정한 좌파의 관점에

서 볼 때, 비록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애도와 추모의 대상으로 여길 수 없다.

국제 노동계급 운동과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와 전혀 닮지 않았다. 북한 정권은 노동자들을 공개처형하고 노동수용소에 가두면서 억압적으로 통치해 왔고, 핵 미사일과 군사비에 우선 투자하는 ‘선군정치’를 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굶주렸다. ‘3대 세습’이 보여 주듯, 노동자 민주주의는 커녕 장기 독재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런 체제와 정

권의 최고 권력자로서 북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억압·착취·독재를 유지해 온 장본인이다.

따라서 진정한 좌파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애도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 노동계급과 민중이 억압과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북한 정권에 맞서 저항하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

물론 북한 정권·체제에 대한 이런 견해 차이를 떠나서, 조문을 이유로 탄압을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에는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 관련기사 3면

남쪽을 향하는 이명박의 ‘예의 주시’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정국을 이용해 디도스 사건과 측근 비리를 덮고 위기에서 탈출하려 한다. ‘북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남쪽에서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정부 당국의 ‘경계’와 ‘예의 주시’는 북쪽보다 오히려 남쪽 내부를 향한 경우도 많았다. ... 검찰의 공안 파트가 곧바로 비상근무에 들어간 것도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김종구 〈한

겨레〉 논설위원)

사노련 재판 계류자들이 최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 등 이미 최악의 정권 위기를 덮기 위한 공안탄압 분위기가 고조돼 왔다. 김정일 사망 정국 속에서 이것은 더 강화되고 있다.

노동운동 단체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직 간부 두 명이 이적표현물 소지와 쌍용자동차 집회 참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당했고,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

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월 26일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 25명을 한꺼번에 연행했다. 최현국 목사도 등록금 집회 참가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명박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투쟁의 고삐를 다시 죄며 공안탄압 강화에 맞서야 한다.

www.marx21.or.kr

계간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2호 2011년 겨울

가격: 16,000원

쟁점 오늘의 위기와 저항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
미국 ‘점거하라’ 운동의 의의
오늘날 중국의 저항 운동
계속되는 이집트 혁명
카다피 몰락과 리비아의 앞날

특집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1년 방한 강연 (2)
금융화와 오늘의 세계경제
사회민주주의 —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인민전선이 진보운동의 패배를 부르는 이유
대담: 오늘의 세계와 혁명적 좌파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1. 마르크스의 경제위기론과 그에 대한 비판

서평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한국 노동계급은 쇠퇴했는가?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마르크스21〉의 지속적 발간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www.marx21.or.kr)에서 휴대문 결제,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